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같이엮자! 불평등 세상





목차

- 인사말 : 한상균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 권영국의 10대 공약

1. 평등한 나라

• 증세	7
• 노동	13
• 주거	22
• 농어민·먹거리	29
• 교육	33
• 문화예술	40

2. 차별 없는 나라

• 차별금지법, 인권	49
• 성평등	55
• 장애인	68
• 이주민	76
• 아동·청소년	78
• 청년	83
• 노인	85
• 동물	87

3.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 기후·에너지전환	97
• 교통	110
• 생태환경	117



4. 돌봄 걱정 없는 나라

• 돌봄	121
• 보육	127
• 복지·연금	129
• 의료	131

5. 함께 잘사는 나라

• 민생	137
• 경제민주화	140
• 민생금융·지역경제	145
• 과학기술·정보통신	150

6. 함께 만드는 제7공화국

• 개헌	163
• 정치개혁	168
• 사법개혁	175
• 언론미디어개혁	177
• 국방개혁	179
• 외교통상	183
• 한반도 평화	184

7. 지역공약

	186
--	-----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에 의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정부가 필요합니다. 추악하고 염치없는 엘리트 집단의 나라, 힘없는 민중의 절망으로 쌓아 올린 저 성벽에 파열구를 내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광복 8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세상이 들썩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모호합니다. 낡은 것은 위기를 맞았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광장의 열망으로 민중 주권의 평등 세상을 열어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진보정치의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재난 같은 불평등이 민중을 빈곤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재난의 진원지는 1,500만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박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한 줌 극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외쳐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투쟁은 오래 걸릴지언정 패배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의 진실을 말하는 진보정치는 패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지지하는 민중의 표를 절실한 마음으로 모아냅시다. 정권을 넘어 세상을 바꾸자는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널리 전합시다.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입니다.

한상균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불평등 세상 갈아엎는 10대 공약

1. 불안정·무권리·저임금 1,500만명 권리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2. 부자감세 원상 복구, 불로소득과세·부자증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습니다.
3.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무상간병,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사회를 이루겠습니다.
6.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 확충, 주택 임차인 무제한 갱신권 인정,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7. 대기업·플랫폼·금융지주회사의 수탈적 경제구조 근본적 개혁으로,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8. 식량주권을 헌법에 담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어민 권리보장 및 국민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9.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로 경제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시대 열고
대외무역통상 다변화 추진하겠습니다.
10. 개헌으로 5.18 헌법전문 수록,
시민발안권 도입, 시민주권 강화,
결선투표,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진영정치 청산하고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1

평등한 나라

- 증세
- 노동
- 주거
- 농어민·먹거리
- 교육
- 문화예술



증세

〈2025년 5월 18일 증세공약 발표〉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반드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침체,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질서의 변화,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들을 복합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노출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달라진 시대에 맞도록 구조전환과 산업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겹겹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배제됩니다.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극단적 양극화와 정치혐오로 빠져들어 다시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과감한 증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협력하여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부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투자의 황금시기도 놓쳐버리고,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시민들이 1500만명에 이를 때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증부세, 법인세 깎아주느라 긴급복지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과감한 증세를 추진하여,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불평등의 세습을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 △ 상속증여세를 90% 상향하여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평등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억만장자 부유세 1~3%를 부과하여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쪽에는 과도한 부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는 과도한 부채가 쌓여있다면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를 10~20% 할증 부과하여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무상돌봄·무상간병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돌봄과 간병으로 인해 소득을 벌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합니다. 이를 끊어내겠습니다.

둘째, 노동과 생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평등을 확산하는 자산에 과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당장 실행하여, 모든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과세하겠습니다. 직장인 평균 소득이 약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이 24%입니다. 금융자산세율은 당연히 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과 자산가의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이 우대받는 사회가 됩니다. △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3%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6% 부과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며, 종부세 부과 과세기준액도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도 1% 인상하겠습니다. △ 이렇게 걷은 자산과세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지키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추진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1500만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우선 △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
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이를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액의 3%
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하겠습니다. △ 종교단체가 예배장소 이외의 목
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종교
단체이든 아니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극우선동가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과세면제 혜택은 부당하
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모든 부자감세는 모두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부자들만 잘사니즘하는 각자도생의 사회일 뿐입니다. 있지도 않은 “엔비
디아 같은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필요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저 권영국은 증세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증세와 적
극적 재정지출로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진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증세 · 재정 공약〉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하겠습니다**
 - 소득세 현행 8개 구간을 5개 구간(6-15-25-35-45%)으로 조정
 - 45%의 최고세율 적용되는 구간을 10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확대
 -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간주임대료 포함
 - 선택적 분리 과세를 누진적 종합과세로 강화
 -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개인당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습니다**
 - 22년 거대양당의 세법개정 합의로 개악된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1% 씩 상향 환원
 - 기존 4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과표 100억원 이상의 고소득 법인의 최저한세율 3%씩 인상
 - 과세표준액 기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미만 구간은 12%에서 15%로, 1천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17%에서 20%로 최저한세율을 각각 3% 인상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강화하겠습니다**
 - 중부세 부과 과세기준액 다주택자 6억원으로,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원상회복
 - 토지분 별도합산 최고세율 1.7%로 상향
 - 주택분 세율 0.6%~3.0% 정상화, 다주택자 1.2%~6.0% 증과세율 원상회복
 - 중부세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향된 60%를 100%로 정상화)
 - 재산세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 시가보다 낮은 재산세 과표기준



을 현실화

- 1가구 1주택자 대상 양도세 비과세 제한(주택양도차익 1회로 한정 상한제 도입)
-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기본공제 폐지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정상 지가상승분 대비 유휴토지의 초과 지가상승에 누진적 세율 (30%, 50%) 적용
-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며 최초 과세는 2025년 1월 1일
- 과세기간 중 지가 하락시 지가하락분 이월 공제

○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하겠습니다

- 세대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강화하고 고소득자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겠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 이월 공제 5년을 3년으로 단축하고, 3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상
-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여 공정과세를 실현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당장 시행

○ 납세자소송제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통제장치 강화하겠습니다

- ‘납세자 소송제’ 도입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회복
-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사업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정 삭제
- 적격성 검사, 타당성 조사 등 절차 엄격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 예산·세법 밀실야합 금지하는 ‘예산심사 정상화법’ 도입하겠습니다

- 매년 반복되는 국회 거대 양당 교섭단체의 비공식 밀실테이블 ‘소소위’를 금지
- 국회법 개정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 회의 통한 안건 심사 제한
- 예결특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예산안 변경 사항과 그 근거를 예결위에 의무 보고

〈2025.5.22. 노동공약 발표〉

하는 일은 달라도 권리는 평등하게!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은 모두 다릅니다.

더욱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통치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노동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노동정책의 목표가 두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평등한 노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자 후보 권영국이 평등한 노동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더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며 아예 법 바깥에 내쳐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즉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 해고 금지, 연차휴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향상된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초기업(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단순히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키워 조합원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인 불평등 노동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고, 동종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추정하는 등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업(산별) 교섭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초기업(산별) 노조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초기업 교섭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부문 산별(초기업)노조가 고용에 관해서도 교



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위원회를 복원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모범적 초기업 교섭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를 개정하여, 양적 요건이 아닌 공익적 필요(동종 노동자 차별 개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해소 등)와 같은 질적 요건만으로 지역뿐 아니라, 산업·업종·직종별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노조법 30조 3항을 구체화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행동 계획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 로드맵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초기업(산별)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다양하게 확산된 만큼, 노동시간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주 15시간도 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정책이 그만큼 통합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부족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전일제 복귀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현행 15/25일에서 25/30일로 10일 추가하고,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겠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고용 계약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법과 제도의 보호망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각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며,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감축의 핵심 대책은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자 참여 보장입니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최대한 확대하고, 모든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 ‘위험의 이주화’ 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은 고용관계가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 즉 도급, 용역, 위탁 등 상업적 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 밖 노동자’ 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낮고 불안정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소득 보장 제도였던 ‘안전운임제’ 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



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즉시 재도입하고, 더불어 배달노동자에게도 유사한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종과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겠습니다.

여덟째,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 협약(87호, 98호)에 부합하게 노동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ILO 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ILO 협약과 부합하지 않고, 공무원·교원의 노사차지를 침해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일과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필수유지업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노동 공약〉

○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만들겠습니다

- 최저임금 연대책임 하도급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 장애인,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적용

○ N잡러, 플랫폼 노동자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일자리 중계형 웹플랫폼 수수료 5%상한제 실시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일 적용

○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구조적 고리를 끊겠습니다

- 임금의 구분지급, 지급확인제 민간건설공사, 제조회도급까지 전면확대
- 포괄임금계약 금지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

○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발적 퇴직,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직장가입 전환

○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훈련 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

- 19세 이상이면 은퇴전까지 연간 120만원, 평생 1,000만원 한도 개인 훈련계좌 제공

○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돌봄휴직을 유급화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 연간 90일 돌봄휴직 중 30일 유급화



○ 1년 최소 1개월 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연차휴가일수 510일 추가, 유급공휴일 합산시 1년 최소 1개월 휴가 부여
- 연차휴가 발생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 사업장 이동시 연차휴가 승계(연차휴가축진제도에 포함)

○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 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주4일,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휴게제도 도입
- 출퇴근 시간도 1시간까지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

○ 과로사 없는 일터,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을 통한 심야노동의 인가제 전환
- 심야노동시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게 부여
- 월간 심야노동 횟수 제한

○ 임금격차 해소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국가임금격차 해소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임금격차 30% 이내, 점차 확대로 민간대중소 기업 임금격차 30% 이내 달성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적정납품단가 제도 등 법 개정
- 근로기준법 6조 차별처우 금지 범위 확대, 차별처우 비교대상 노동자 확대
- 노조법상 사용자단체 사업주단체로 확대, 산별교섭 법제화 및 효력확대

○ 수요자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법정정년을 연장하겠습니다

- 법정 60세 정년, 65세로 연장
- 수요자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청년채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의무고용할당 현행 3%에서 5%로 확대, 민간 대기업도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 경영책임자 범위 발주·임대 등 다양한 지배관리 영역까지 확대
- 질병, 정신건강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현장실습생도 중대재해 대상으로 포함
- 기업 매출 대비 벌금조항 신설로 대기업의 책임강화

○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재해수사청 신설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경찰청(중대시민재해)으로 나뉘져 있는 중대재해 수사 일원화
- 수사기간 단축, 중대시민재해 수사 실질화, 중대재해 수사 전문인력 증원

○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건설업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적정 공사기간 준수 의무 부여
- 발주처의 의무 강화
- 다단계 하도급 제한
- 건설업 사고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도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재해보상법을 만들겠습니다

-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뿐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도 안전보건법 적용
-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공무원, 교원까지 확대 및 보호 실질화
- 농어민 재해보험 산재보험으로 통합, 의무가입
- 예술인,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국가 지원



주거

〈2025년 5월 28일 주거공약 발표〉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살아서 돌아가도 마음 편히 몸을 누일 공간이 없는 나라, 광장을 채운 응원봉이 집에 돌아가면 눈치를 보고, 쫓겨나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가도 모르는 나라, 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남의 투기에 동원되었다가 내 전세보증금까지 날리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점유형태), 혼자 살든 함께 살든(가구형태),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소재지역), 아파트에 살든 빌라 원룸에 살든(건물형태) 집 걱정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걱정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에 대비하며, 서로 돌보고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나라, 집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다른 걱정까지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860만 세입자의 절반 이상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15년간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여, 공공·사회주택 총 재고가 세입자의 절반인 430만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여 보태겠습니다.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비사업의 용적률 지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공공토지를 마련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 세입자만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합니까? 세입자의 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겠습니다.

렌트카도 다 등록하고 임대하는데 어떻게 훨씬 더 중요한 주택은 제대로 품질도, 재무상태도 등록하지 않고 막 임대합니까? 임대용 주택은 등록을 의무화하여 불법건축물, 보증금이 위험한 수준의 주택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임대주-임차주라는 표현을 정착시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떼 내고 <주택임대차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않아도, 당장 사는 곳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주거권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택청을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개편하여, 토지주택 공개념을 전면화하고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이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민간의 등록임대주택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운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과 내집마련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개편하여 공공토지를 확충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도 2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 토지 선매권을 도입하고 용적률 지분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로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고 다양한 경로로 녹색돌봄마을 실현하겠습니다.

스스로 힘을 합쳐 해결하고자 하는 풀뿌리의 시도와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으로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트겠습니다.


1인가구가 많아진 고령사회에서 도시와 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공공과 함께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녹색돌봄마을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전세가를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만들고, 전세대출 상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며, 월세 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전세 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집값이 조금만 변해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등 주택에 걸린 빚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거비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세에 대한 대출’에서 ‘월세에 대한



보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오히려 월세를 밀어올리지 않도록 임대료는 주택의 품질에 맞춰 규제하고,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선구제와 전세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연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채권매입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를 선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보장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무엇보다 채권회수의 지난한 절차를 국가가 맡아서 해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특별법 시한은 앞으로 모든 전세가 등록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일곱째, 최저주거기준을 내실화하고,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공공주택부터 도입하겠습니다.

2000년 건교부 고시로 도입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역사가 사반세기 지났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온수와 채광 기준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고시원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공간이나 불법 건축물을 줄여가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보다 훨씬 넓은 적정주거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친구나 가족이 며칠 머물수도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주택부터 이를 지켜 지어서 일반 시장의 주택들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녹색돌봄마을 전환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탄소중립과 지역사회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애초에 낡은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늘어나던 인구 덕분에 새로 이사를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떠넘길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에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주택이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여 서로 나누는 마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노후에 대비해서 서로 돌보는 녹색돌봄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주거 공약〉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로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수도권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
 -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 수용
 -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이상 확보
 - 공공주택에 단열,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하여 녹색공공임대 주택으로 탈바꿈

-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폐지하고 특례 조항을 축소
 -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실시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 공공 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효율 증대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의무화 도입
 - 1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그린리모델링 건물은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서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임차료 지원하고, 임대료인상 제한 강화하겠습니다
 -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 내 임차료 지원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고, 갭통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10+10플랜으로 집 걱정 해소하겠습니다

- 혼인 및 동거 10년 이내 가구는 10년간, 아이가 태어나면 10년간 (최대 20년) 공공주택 또는 주거지원비(월 60만원) 제공
- 3자녀 가구(중위소득 140% 이하)는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농어민·먹거리

〈2025년 5월 10일 농어민·먹거리 공약 발표〉

“기후위기 시대, 천하의 근본인 농어민을 살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위기가 모두 농어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농어민을 살리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 농어업은 늘 ‘돈 안 되는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뒤집는 것이 사회대전환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인 농어민을 살리는 길,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살길입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농어민입니다. 동시에 농어민은 기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같은 기술적 해결책에만 몰두하면서, 실제로 탄소를 감축하고 저장하는 친환경 농업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선 안 됩니다.

공익형직불금 전체는 물론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합니다. 쌀부터, 급식부터 친환경으로 모두 바꾸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태농업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후재난에 확실히 대비



하겠습니다.

둘째,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공급망 문제가 반도체 아닌 식량에서 일어난다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 걸맞은 식량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밥상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지역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먹거리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식량주권법〉 제정,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산물 수입개방 전면 재고

우리 식량자급률은 2023년 기준 49%입니다. 사료용 수입까지 따지면 20% 언저리로 떨어집니다.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한자리 숫자로 나옵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55%를 목표로 잡았지만, 22년 달성에 실패했고 27년으로, 또 29년으로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줄어드는 농지면적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고, 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생태농업에 우선 임대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을 파괴한 과거 국제무역협상들을 전면 재고하여 자급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채소류, 과일류는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서 중간유통업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같은 구조가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산비와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경매제를 폐지하고,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내, 지역 간 결연으로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여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밭을 갈아엎지 않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회수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충분한 공공서비스

초고령화, 지역소멸은 농어촌의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억지 서비스라도 만들어 살려야 합니다.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는 물론 국토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폐기물 집중 등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현실도 막겠습니다.

농어촌주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 위험물질의 농어촌 폐기를 막겠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치안 인프라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성 평등,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예산 6% 확충,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 원칙으로 전환

우리나라 전체 예산 677조 중, 농업 관련 예산은 20조가 채 안 되어 2.9%에 불과합니다. 예산증액이 절실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방식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위기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농어민 보



호, 후계 육성 등, 직접 농어민을 향하는 예산이 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직불금 예산증액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업, 먹거리 관련 공직자는 선출직과 비선출직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 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후생태정책실 신설하고, 여성-청년 등 미래 농업인력을 위한 공직의 직급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식량주권과 UN농민권리선언의 정신을 헌법에!

제헌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을 명시하고, 62년 헌법에서는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 등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80년에 소작제도의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등이 헌법에 등장하며 지금의 농어업 경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제9장의 농업조항을 폐지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농민과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농민의 생산자원에 대한 권리,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보호책임, 후계 육성과 정책결정권, UN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교육 공약 발표〉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수용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시작한 교육혁명, 권영국이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저 권영국은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입시경쟁을 줄이겠습니다. 입시경쟁은 대학서열화 때문에 생깁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입시경쟁이 완화됩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점교류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광역시도마다 서울대를 하나씩 만들어 입시경쟁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서울대 10개마다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겠습니다. 글로컬 일자리, 친환경 일자리, 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값진 노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벌 학력 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 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 뽕뽕이’ 를 돌립니다. 돌봄교실, 늘봄학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음이 필요” 합니다. 지역사회마다 아동 돌봄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직접 돌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초등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로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입니다. 국방비 예산 총액 57조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당장 ‘선행교육법’ 을 개정해 학원 선행교육부터 바로잡겠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으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개헌 수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부족합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개헌’ 이 필요합니다. 기후 헌법, 농민 헌법과 함께 ‘새로운 교육 헌법’ 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유아와 초등학교는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 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유아·초등 입시 사교육’ 규제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적용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사교육 종사자 일자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적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송대 대학원 학비는 학기당 130만 원입니다. 직장인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면 저렴한 학비, 편리한 수업으로 모두에



게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 을 막고 법조계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로스쿨 3년간 학비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비, 식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서민 자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의대 정원’ 대란과 똑같은 우를 범할까 걱정됩니다. 대안은 ‘공공 법학전문대학원’ 입니다. 그래야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바로잡고 모든 청년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법조인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방송대 로스쿨,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법개혁의 시작입니다.

셋째, 무상교육의 완성, 지방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대 무상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지방대 등록금은 총 5.9조 원, 이미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2.3조 원입니다. 추후 3.6조 원을 확보하면 지방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3.6조는 지방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을 막는 종잣돈입니다.

지방대 무상교육과 함께 지방 공공의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 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해법입니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병원이 확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마다 공공의대를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권역별로 지방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 소멸도 막겠습니다.

넷째, 교사와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권을 지켜야 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권을 지키려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교사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아동 청소년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스웨덴의 만15세 청소년 톤베리가 기후위기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듯,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위대한 시민의 힘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힘으로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공교육의 힘이 민주시민을 길러냈습니다.

저 권영국은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치인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정치의 민주주의와 함께 일상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교육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를 돌보는 생태시민을 길러내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동인권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이 권영국이 제안하는 3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공약〉

○ 교실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소규모 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학령인구 대응 및 학교 양극화 해소
 - 학령인구 수요에 맞는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학교 통폐합 지원 폐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소규모 학교로 전입 지원
 - 특화 교육과정 및 도서관체육문화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유 협력 모델 확대
 - 기존 대규모 학교 시설은 지역 통합 캠퍼스로 단계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이동 추이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책임교육 실현
 - 1수업 2교사제 도입
 - 상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특수교사, 학교복지사, 인권전문인력 단계적 확대 충원
 - 학생 인권 법제화, 교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 총장 선출 제도 혁신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력 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 지역균형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고교 평준화 법제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지원 확대
- 초·중고 전환기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기숙형 ‘이음학교’ 설립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 일보식 부카츠 모델 도입하여, 학생 누구나 1개 이상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기업에서도 동아리 활동 장려하도록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제공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 전국민 체력 측정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연령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 예체능 직업 활동과 생활 동아리 활동의 선순환(직업 진입, 지도자 전환 등)
- 별도 예산 편성하여, 문체부-지방정부-교육부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신설

○ 노동교육 강화

- 산별노조 참여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추진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
-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전문대 지원 확대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반영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사립유치원 점진적 법인화와 처우개선
- 의무 없는 영유아학교 제도 마련, 무상교육, 단계적 유보통합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확산 및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현행 GDP 0.9%를 1.1% 이상으로 확충
- R&D 예산 증액 및 연구자 처우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국가책임교육 확충 위한 총액인건비제 개선
- 교육재정 참여예산제 실시

○ 누군가의 가족 학교구성원 보호

- 학생인권법 마련
- 교원 등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제도 보완 및 법령 제개정
- 학교 행정직원 증원
- 학부모회 법제화
- 학교장 직선제 시범실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 교육공무직의 법적 투명인간 해소,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국가 차원 인사지침 마련
-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
- 교원평가 폐지, 대학 자체평가 위주로 전환
-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한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 4대 비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립학교 살핀 고양이법
- 정부부담금 미납시 상근임원 보수 지급 제한



문화예술

〈2025년 5월 23일 문화예술 공약 발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예술은 그 시대와 사회의 정신, 가치관, 현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의 문화예술이 국내외적으로 각광 받은 이유는 우리 시대의 억눌렸던 정신과 현실, 열망이 문화예술을 통해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데 우리 문화정책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패악을 드러냈습니다.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 예술적 자율성, 사회적 필요보다 관료 조직의 편의, 상위조직의 요구, 성과주의적 수치,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피해자 회복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참여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 재구성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하여 개편하고, 기초예술과 문화 중심의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화산업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지원사업과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노동을 보호하고 문화기술 R&D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현실을 넘어 장르별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ی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산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문화한국 2035>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지역별 문화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창작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자체 및 예술감독 등 인선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를 확립해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즉시 복원하고, 예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복원 및 확대하고,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권, 성평등·안전권 등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독립적 권리구제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창작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확대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강화를 통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 침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생태계 계약 관행을 갈아엎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의뢰, 용역계약서 작성 시 예술인과 문화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장르간 경계와 낡은 법조항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표준 너머 계약 형태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예술기관들이 기준 삼는 사례비 및 원고료 단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꼼꼼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비일비재한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를 강화하고, 모두가 4대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산업계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거래, 갑질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원청과 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문화예술·콘텐츠산업 불공정 계약 및 착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디 창작자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독립(인디) 음악·영화·미술인들이 대형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접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연장·녹음실·전시공간·독립영화 상영공간 등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형 콘텐츠 기업과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창작물의 유통·홍보·공연·상영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창작자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을 개선하고, 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여성·성소수자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예술인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해결과정과 기준 마련을 위한 예술계 내 논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의 권리를 증진하고,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을 막겠습니다. 불법성과 명백한 권리침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을 폐지해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심의의 위험을 막겠습니다. 심의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 지원사업을 점검·확대하겠습니다. 난개발과 상업화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과 예술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관 등 역사적 문화공간을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존정책과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겠습니다.

열번째,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색내기식 전시 행정에 쓰일 예산은 그만! 독서와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를 국민에게 지급하여 지역 서점과 출판 생태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출판 지원 정책(세종도서, 문학나눔 등)에 그치지 않고, 책읽는 문화 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과 독서 문화의 문턱을 낮추는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책의 공공성과 지역문화 다양성을 위해,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 정책을 넘어, 서점·출판사·작가·독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평등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 지원과 징계권을 강화하여 스포츠 현장의 구조적 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운영을 개선하여 교육 본연에 충실하도록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성인직접 관점의 스포츠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스포츠단체 임원 여성 비율 상향을 통해 성차별 없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응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약〉

○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이 아닌, 일하는 모든 예술인에 예술인 산재 보험 적용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 서면 계약 및 개별 계약 의무화, 근로계약 회피 금지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을 금지하겠습니다

- 창작자 동의 없는, 창작품의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금지 제도 마련
-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하고, 콘텐츠 발전기금을 징수하겠습니다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확대 유력
- OTT 사업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발전기금으로 징수, 국내 콘텐츠 산업에 투자

○ 창작자의 저작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와 포괄적 이용허락 금지
-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따른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 보장
-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가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음원 저작권 사용료 분배비율 결정을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저작권위원회 구성에 대중음악 창작자, 수용자 참여 보장



○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조정
- 예술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 예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시행
- 적합 직종에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인센티브 결합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 보완

○ 학교 예술강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속사업 제도화
- 학교 예술강사의 법적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 학교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 학교 예술교육 확대 및 다양화

○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을 돕고, 공정한 산업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OTT에 콘텐츠 발전기금을 부과하여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
- 모태펀드 투자확대를 통한 한국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제작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 제작사에 표준계약서 사용
-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 기초지방정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하여 단계적 조성
- 기초지방정부마다 문화재단 설립, 지역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하여 행정지원 체계 마련
- 유희공간과 폐시설에 작은 미술관,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조성
-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마을별 공연, 전시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문화마을 포털’ 개설
- 예술인의 마을 예술활동 참여 지원(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



육 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의 개발 및 보급(지역 문화재, 지역 문화사 등)
-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설립 및 운영 지원

○ 독서문화를 진흥하겠습니다

-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산업, 동네서점 활성화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동네서점 우선 구매 제도 확대
- 독립서점의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 지원
-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 확대
- 도서관별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모든 도서관 운영형태에 적용되는 사서 표준임금 기준 및 노동조건 기준 마련

2

차별 없는 나라

- 차별금지법, 인권
- 성평등
- 장애인
- 이주민
- 아동·청소년
- 청년
- 노인
- 동물



차별금지법, 인권

〈2025년 5월 22일 인권정책발표〉

차별과 혐오를 갈아엎고 존엄·평등·공존의 인권 사회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설명되는 세상, 경쟁과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권’의 의미를 존엄과 평등, 공존의 원리로 확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려면 모든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차별 받거나 소외·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기업·집단의 수단으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가는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대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중대재해와 대형참사, 기후재난으로 생명안전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과 성소수자·청소년·이주민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상·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광범한 검열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불안정 노동자는 날로 확산됩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으니, 인간답고 존엄한 삶은 헌법상의 공문구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권영국은,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빈곤과 각자도생의 삶에서 벗어나. 존엄과 연대적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사회운영의 제1의 원리로 바꾸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끝내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복지·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돌봄 체계로 바꿔, 모든 이들이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해 노인빈곤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명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윤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국가와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와 더불어 성별 정체성과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는 사유들을 모두 명시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차별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돌봄·삶의질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폐기하고, 대신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돌봄·삶의 질 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사회적 돌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 성소수자 · 장애인 · 청소년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미디어 등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성 · 재생산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동권 · 교육권 · 노동권, 탈시설 자립 등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 인권법,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어린이 ·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상 · 표현 · 결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여전히 존치 중인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집시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회의공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 · 제도적 제약을 없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설립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고, 노조의 정치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빅테크의 공정경쟁 훼손 및 독점력 남용 제한,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빅테크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시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인권 책무 기준을 강화하고, 이윤지상주의가 사람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반인권 기구’ 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겠습니다.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원에 반드시 장애인권 전문가를 포함하고 다양한 활동적·직업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권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을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및 차별시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0.9%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 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에서 ‘사람’ 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난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라 바깥에서도 인권 기준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권·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인권 외교 리더십 강화하겠습니다. UN 인권조약 등 국제 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법·정책 정비 및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권역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주도적 외교 활동을 펼치고, 민·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서구 중심 인권 개입을 넘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인권 지향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협력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HRBA) 원칙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협력국 인권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을 기획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지 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적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주도 인권 증진 활동 및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존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별·혐오·불평등을 자양분삼아 자라나는 극우 정치와 극우화된 사회의 발흥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클릭하는 시대,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차별·혐오·억압을 갈아엎고, 존엄·평등·공존의 인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인권 공약〉

○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간병·상담·복지, 치료의약품 의무공급 등 감염인 보호 및 지원조치 정비
- 강제검진·전파매개 금지 등 감염인 인권침해 조항 삭제 내지 개정 등 전부 개정

○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성별변경 요건 완화 및 그 절차 등을 규율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 성전환자 수술 및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정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과정 개설 의무화
- 국가기관, 교육 및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및 기관 평가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 동의 및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의무화
-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제 도입, 인사 청문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의견 청취와 반영 제도화

〈2025년 5월 13일 여성 공약 발표〉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입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반여성주의 포퓰리즘으로 탄생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쌓은 혐오와 배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더 많은 폭력과 차별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계엄과 극우세력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지며, 우리 민주주의에 공포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페미니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광장을 채운 응원봉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빛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만난 세계’의 희망을 불렀습니다. 국회로,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거통고와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으로 달려와 준 2030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대선이 시작되자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장의 주역이 여성이라는 말을 애써 회피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여성 공약은 군복무희망제 하나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을 따라 ‘여



성가족부 폐지' 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 미아역에서 또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는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제, 광장을 함께 지켰던 페미니스트 후보 권영국이 성평등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여,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성평등 정책을 재건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성평등부 장관을 성평등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고,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 방향에 성평등 정책 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별, 나이, 학력, 고용형태,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시민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법> 등을 지원하여 가족형태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는 안됩니다.

셋째,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강간죄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무법상태에 방치된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형법상 남아있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 지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여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삭제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성평등부 산하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범부처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입법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를 필두로 현재까지도 각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피해 방지교육’ 의무 대상에 정정당을 추가하여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여,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부모를 만들겠습니다.

2005년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자녀 출생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남녀가 평등한 부모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지원 확대 등으로 유리천장 없는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저임금 돌봄 노동 등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모두 육아휴직이 보장되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70%로 높이며, 육아휴직 각부모 할당제를 도입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유리천장을 깨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여 평등과 존중이 기본값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지침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성적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기반 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평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시 여성 비율 30%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고, 이를 어길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선거 후보자 중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서 20



년 내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성소수자 공약 발표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광장이 만드는 무지개수호대 엘라이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지난겨울의 삭풍은 매서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서로를 지켰습니다. 평등수칙으로 우리가 만든 광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응원봉과 깃발로 다시 만난 세계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의 혐오정치는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자들이 그의 극우 포퓰리즘을 물려받으려 합니다. 전쟁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수자를 조롱하며 폭력과 차별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평등과 환대의 가치를 믿습니다. 누구도 출신과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가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존엄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미래는 우리가 지켰던 광장의 빛처럼 밝을 것입니다.

첫째, 성소수자 국정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OECD 평균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는 200만명이 넘지만 국가의 정책대상 인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만들 것을 국무총리



및 각 정부부처에 권고했지만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모두 불수용한 상태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동성커플/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신설해서 성소수자를 제도 및 사회문화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합의를 핑계로 또 도망간 차별금지법, 권영국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셋째,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동성커플의 관계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 권고,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한 동성혼 법제화, 권영국이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넷째,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성정체성에 따른 진정한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는 존엄과 가치에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라는 판결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에 근거한 성별정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다 못해 가혹해서 유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별인정법을 제정해서 수술이 아닌 진단서 만으로, 법원이 아닌 관공서에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우리 법은 아직도 가족을 혼인과 혈연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동성커플들은 연금이나 주택은커녕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대리인 혹은 보호자의 권리를 배우자나 혈연관계만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사회보장 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성평등 공약〉

○ 성평등 돌봄, 일·생활 균형 실현하겠습니다

-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0일, 출산전후휴가 120일,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 유연한 근로시간단축제도 분할 사용 확대, 출산 연계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
-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가족돌봄휴직 실효성 제고
-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공부문부터 성별 균형 육아휴직 목표제 실시
-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실질적 육아휴직 소득보장(상한 상향), 사후지급금 25% 규정 삭제
-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대체인력 노동자 소득 보장
- 육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기업(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제 명령조항 신설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배상지급 명령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를 보장하겠습니다

- 직장 내 성폭력부터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마련
-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적용 및 피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주, 상급자,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있을 시 벌칙 조항 확대



- 사용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성폭력 은폐, 비호 징계 규정 마련
- 고용단절, 여성창업, 중장년 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직업 교육 및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강화
- 새로일하기센터 확충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보장
-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 안전 사회 구축하겠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젠더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비동의의 강간죄 조속 도입(강간죄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 이 아닌 ‘동의 여부’ 로 개정)
- 음란, 성적 욕망,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 스토킹 교제 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권리보장’ 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 교제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 성매수자 처벌 강화와 성산업 규제 등 범죄 통제 체계 강화
-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 법제화 등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
-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지침 재정비,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
- 성폭력 미 소멸시효 개선·친족 성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 성폭력 수사 재판과 정상 인권침해 방지
-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강력한 신변보호 조치, 국비 지원 상담소 확대
-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 성적 대상화 근절

○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법 제도 전면 정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요건 삭제 및 기술 기반 성폭력 처벌, 가해자 책임 부과 입법
-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경찰 즉각 처리 조치 마련
- 디지털 성범죄물 활용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몰수와 추징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 신고·상담·긴급삭제·법률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까지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조항 신설, 전문인력 배치
-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실태 파악,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 보급

○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 사후피임약 도입과 시술방법, 안전요건 기준 마련, 임신중단 시술방법과 지침 표준화
-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피임 접근권 보장
- 응급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 피임방법 전반 건강보험 적용
-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 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 정보와 교육 제공
- 안전한 월경권 보장,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실질 예산 확보
- 여성 건강 종합 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와 공공병원) 역할 강화
-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 마련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는 인권 침해성 광고, 방송 규제 강화

○ 여성 안심 주거 실현하겠습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신설 또는 확충시 비용 지원



또는 세제 혜택

- 최저 주거 기준에 '안전 기준' 을 포함,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 '여성흡방범서비스' 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여성 범죄 관련 부처 간 통계 기준 통일
-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체계 확충 : 위급 상황시 CCTV, 여성 안심앱 및 112, 119 등 연결

○ 한부모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한부모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부모 우선 고용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 요건 완화
-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정책 사각지대 개선
- 한부모 가족 더블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제고
-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 출산 이후의 지원까지 통합 서비스 구축
- 다양한 가족의 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확대, 맞춤형서비스 통합 지원
-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대상 가정방문 상담 지원, 부모교육, 생활 도움, 법률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 지원 강화

○ 평등한 삶,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 '건강가정' 용어 삭제, 건강가정기본법 목적조항부터 전면 개정
-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자녀 출산, 양육,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자격 부여)
-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로도 사업장 변경 보장
- 이주여성 노동자 고용 사업체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지원
- 장애여성 성인지적 생활 자립 기반 마련, 장애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지원 체계 확립

- 북한이탈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 수립과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장애인


〈2025년 5월 21일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사회, 갈아엎겠습니다.

장애인들이 24년 간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력과 탄압에도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혜화동성당 종탑에까지 올라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폭우와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 코로나19, 사회적 참사에서 장애인은 항상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기보다,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비장애중심주의 때문입니다. 이제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No One Leave Behind),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책은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권리가 중심에 있기 보다는, 성장주의에 기반한 재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수혜적 정책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1,842일동안 광화문역을 지키며 이루어냈던 장애등급제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가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등급으로 조각내는 현실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등급은 비록 없어졌지만, 장애인서비스 지원종합조사로 인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이동지원, 소득·고용 등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관리 영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건강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약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개인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삶을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누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사비마비에 정신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살며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1구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활동지원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도를 사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에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금의 장애인종합서비스이용조사표에서 배제되는 장애유형이 보다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매칭되지 않아 지원공백에 남겨두지 안호록 최중증장애인 가산수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한 달에 890건에 다다른 폭



행이 경찰에 의한 CCTV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집단으로 수용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은 시설 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500개 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약 2만 7천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18.9년, 100인 이상 대형시설의 경우 평균 26.8년 이상 장기 시설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 및 단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서며 폐기되었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One-Strike 아웃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폐쇄 및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탈시설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탈시설 추진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외치던 당시,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도 없었습니다. 안전 장치 미비로 승강장에서 떨어져 다치고 죽는 시각장애인이 많아 지하철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더불어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권리입니다.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일일운행률 2/3를 보장하겠습니다.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의 면적기준 및 건축시기 제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만 명 신설로 최종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증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난 10년 간 증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종증장애인은 전통적 노동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직무 개발과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고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약 1만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보호작업장에서 월평균 4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동을 최종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며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을 보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로 장애인 임금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최종증장애인 일자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이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해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6배 이상에 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겨우 시도별로 1개씩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세종과 울산에는 설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은 모든 국민의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장애인 입원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간병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하는 의료인이 없어 부모와 활동지원사가 불법을 감수하며 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꼼꼼한 의료지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장애인주치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다학제 진료를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혁해내겠습니다. 장애인 간병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공약〉

○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 버스 대·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미이행시 패널리티, 초과 시 인센티브
-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휠체어 접근 버스로 의무화
- 저상버스 연료 지원 및 저상버스 부품 조달과 수리 인프라 개선
-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단기 대체수단 마련
-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 장애인콜택시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법정 대수 2배 확대, 운영비 지급 확대
- 장애인콜택시 직영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 민간 위탁 시 위탁 기준 내실화,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화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시설 인권조사 실시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쇄, 경찰에 고발조치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및 전반적 권리 규정



- 교육·복지·보건의료·문화·주거·교통·고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 정책 도입
- 지체,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른 정책 마련

○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예외적용 조항 폐지로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 24시간 활동지원, 2인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
-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까지 야간순회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현실화
-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바우처와 인건비 분리
- 전동휠체어 고장시 수리비용 수가 신설, 배터리 등 소모품 수가 인상 및 신설

○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기본 보장
-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 장애인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 개선

○ 장애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설치, 자립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홈헬퍼사업 전국 확대

- 시설거주 장애여성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맞춤형 탈시설 정책 마련

○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정신장애복지법 개정, 시도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 원 센터 설치
- 동의입원 후 대면심사 강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 제도 폐지
- 시군구마다 정신재활시설 의무화 및 주간지원서비스 도입

○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서비스 시스템 마련 및 시행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도입 및 방송통역 모니터링단 구성
- 관공서·금융기관·의료기관 수어통역, 문자서비스 도입, 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
-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등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 촉수어 등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지원체계 마련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접근성 보장 표준형 제작 및 보급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방송에 수어, 자막, 화면해설 의무화



이주민

〈이주민 공약〉

○ 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 설치
- 국내 이주민 전담 정부기구 ‘이민청’ (국무총리 산하) 설치
-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을 담은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실시하겠습니다

- 노동비자 영주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와 기본권 보장 체계 마련
- 고용허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술 숙련도 등과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 충족시 고용허가 이주노동자의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전환 및 노동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 숙련기능비자, 장기근속비자 이주노동자 대상 국가 별 쿼터제 노동비자 영주권 제도 도입
- 마등록외국인 구제제도 도입
- 이주배경시민 통합 신문고(콜센터) 마련
-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보호 및 성희롱 예방 의무화
- 이주 농어업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 농촌 정착 지원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을 만들겠습니다

- ‘인권피해자’ 로 난민 규정
- 신청서 작성 지원시스템 개선, 심사회부 사전 판단제 폐지 내지 최소화
- 보호시설에서의 장기체류 금지 및 시설 개선

- 전문 심사인력제 및 심사 이의제기권 도입 등 심사과정 개선
- 심사 일정 기한 지연 시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假)인정

○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혼이주민이면 이혼, 육아 여부 상관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적용
- 이주여성 지원 및 인권 보호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및 국적취득 간소화
- 방문 동거(가족 초청)제도 개선, 해외 거주 가족의 입국 간소화
- 다문화가족을 위한 세분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강화
- 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해 규제 강화
- 국제결혼 주요 국가의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확대
- 체류권 보장 및 인권 보호 국제협약 비준 및 차별철폐협약 이행

○ 문화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개선
- 다문화 수용성 높이는 교육제도 마련
-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
-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개선 및 확대
- 이중언어 보조교사와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확충
- 중도 입국 학생의 언어교육을 위한 KSL 어학연수 프로그램 도입
- 다문화자녀의(이주배경아동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 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등록 법률 개정 및 출생통보제 도입
- 이주 아동 출생 확인증 발급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2025년 5월 11일 청소년 공약 발표〉

광장을 지킨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민주주의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4.19 민주혁명부터 지난 12.3 내란 당시 국회와 광장에서도 청소년은 언제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깃발을 들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와 교육은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훈육하고 통제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들이 폐지되면서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장을 함께 지킨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장이 만든 진보 대통령, 권영국이 약속합니다.

첫째, 수능 자격고사화로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는 고등학교 경쟁에 이어, 중학교 경쟁, 초등학교 의 대 대비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고사화로 변경하고 국공립대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입시경쟁을 완화하겠습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하고 교과보충·방과후 프로그램 무상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학교가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억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학교가 혐오와 차별, 폭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하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맥락에 있는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이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서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자의로 탈가정한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쉼터를 개편하고 확대하며,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가족정책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영역으로 다룰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및 성소수자 청소년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성평등교육을 내실화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임신중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해결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 성중립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및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고 취업지원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만들어준 민주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선대위와 더 많은 청소년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공약〉

○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수당을 성장기 전체인 18세(고등학생)까지 확대
-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 10만 원 지급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인상

○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 0~18세까지 모두에게 보편 적용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부담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0~18세까지 매년 한 명의 치과 주치의에게 등록해 구강건강 관리
- 치과주치는 구강건강평가, 관리계획, 구강건강증진, 질환관리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예산 확대로 아동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예산 OECD 평균 확보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대, 아동학대 전담인력 전문 양성체계 마련
- 아동보호전문요원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으로 고용안정
- 아동 사망검토제 도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 226개 시군구마다 학대아동쉼터 설치

○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로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까지 나아가겠습니다

-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및 단계적 폐쇄
-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 확대 및 처우개선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아동수출국 오명은 이제 그만, 해외 입양 일몰을 선언하겠습니다**

- 해외 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강화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현실화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언어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을 위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사, 학업, 정서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기후재난 시 아동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아동 참여 및 아동의 필요 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 친화적인 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지원

○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아동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 소외되거나 취약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과 존엄성 보장
-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로 선진국 평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아동·가족예산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분절화된 사업정비로 아동예산 안정성 확보

청년

〈청년 공약〉

○ 청년 일자리보장제

- 만 15~34세 청년 중 실질적 실업상태인 누구나 국가가 일자리 보장
- 생활임금, 사회보험,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연간 50시간의 직무역량교육 등 보장

○ 청년사회상속제

-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 보호종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000만원 지급
-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 받는 청년의 경우 환수
- 3,000만원은 4년제 대학 4년 평균 등록금(2,680만원) 기준
- 2025년 기준 만20세 인구 43만명

○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
-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대표를 지정하여 ‘2050미래위원회’ 구성
-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에서 후보자 중 20%는 청년 추천 명시하여 청년할당제 법제화
- 선거권 16세로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조항 18세로 하향



○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최대 3년 지급(주거급여 수급자 외 중위소득 120% 이하인 34세 이하 1인 가구주 대상)
-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60%) 및 기준 임대료 인상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대폭 상향
- 청년 1인 가구 및 다양한 주거형태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
- 학과·학교 통폐합 시 학생 과반 동의 의무화
- 대학 네트워크로 공동 교육과정 등 협력 확대, 공동학위 수여, 향후 통합전형 실시
-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 청년 의무고용과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 현행 3%에서 5%로 확대, 민간대기업에도 적용
- 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 평생 1,000만 원 한도 개인 훈련계좌 제공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지급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일 적용

○ 미취업 청년에게 문화패스를 지급하겠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 대상 연 10만 원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이용권 형태로 지급

노인

〈노인 공약〉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어르신 일자리 확대, 정부예산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 고령자 다수 사업장에 고령노동자지원팀 설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다양화

○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의료인 및 복지사 상주,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한 공공실버임대 아파트 확대
-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형 실버주택 도입,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 보장
- 자가 주택개조 지원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 고령자 자가운전자 지원,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30%까지 확대
- 방문재활급여 신설 등 장기요양급여 다양화
-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다양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경로식당(일반·무료급식) 급식비 기준 마련, 경로당 급식비 지원
- 노인 및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
- 어르신 가정에 와이파이 무료 보급 및 데이터 요금 지원
-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체험존 운영, 스마트기기 및 키오스크 체험



- 어르신 자원봉사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 장례비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공병원 장례식장을 착한 장례식장으로 운영, 장례식장 직영으로 전환
-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시군구별로 착한 장례식장 지정 운영 및 지원
-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

〈2025년 5월 23일 동물권 공약 발표〉

‘동물복지’를 넘어 ‘동물권’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열네살 반려견 ‘말이’와 살아가는 반려인입니다. 말이는 제게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한 존재입니다. 공장식 축산 문제를 다룬 PD수첩 방송을 본 뒤로 육고기를 되도록 줄이는 식단을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권영국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위계를 ‘합리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자본주의 체제는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자원’이자 ‘수단’으로 여기며 무분별하게 착취해왔습니다.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고 비인간 동물의 서식지를 밀어내는 난개발, 고유한 생명을 ‘고기’로 상품화하기 위해 빠르게 키우고 죽이는 ‘공장식 축산’,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각종 ‘동물착취산업’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기후생태위기는 인간이 비인간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아래 스스로를 생태계로부터 떼어내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조류충돌로 인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장식 축산 시설에서의 노동자 산재와 죽음,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한 토지오염 등도 모두 인간이 비인간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착취할 때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재난입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위협 당하고 있고, 지구 위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만 동물로 여기는 현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시혜적인 ‘동물복지’를 넘어 지구 위 모든 동물이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 비인간 동물이 어우러진 공존·공생의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제2공항 등 신공항,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생태파괴형 양수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막겠습니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로 담수어와 수생 식물,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서식 조건을 되살리겠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을 줄여나가고,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그물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 포유류 서식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보호구역에서의 어업과 관광을 금지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 야생동물 서식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파편화된 야생동물보호구역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육상과 해상 보호지역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동물 산업을 정의롭게 전환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고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형마트, 동물병원, 펫숍에서 반려동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해 반려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 교배와 사육을 하는 ‘동물공장’을 폐지해나가겠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등 동물을 감금하고 전시를 해서 이익을 얻는 시설을 지자체 및 국립공원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생츄어리’ 나 ‘동물 돌봄 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육곰 산업 폐업을 지원하고 정부에 의한 전량 매입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혼획된 고래의 유통과 취식을 허용하는 고래고시 조항을 폐지하고 고래사체의 유통·판매·취식을 종식하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축제를 폐지하고 동물학대 예방 체계를 만듭니다.

‘산천어 축제’ ‘소싸움’ 등 동물에게 고통과 죽임을 안기는 동물축제를 폐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학대로 인한 중상해, 살해 사건 발생 시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실행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권 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 학대 예방과 동물권 존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증식 또는 길러진 개’에 대한 학대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금지하고 백신 접종 등 동물 감염병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채식 선택권을 의무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동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하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고 보호의 예외 조항과 반려동물 영업을 허용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체법으로 반려동물 중심의 시혜적 관점이 담긴 동물복지법이 아닌, 동물권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더 나아가 동물의 권리 조항을 기재하겠습니다.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동물청(가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동물별로 분산된 주관부처를 통합하겠습니다.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폐지하고 민관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수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를 방지하고 공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다발 구간에 로드킬 방지 위한 도로 시설(유도오탈타리, 주의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설치를 확대하고 정비 하겠습니다. 새 충돌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물 창문 및 투명 방음벽 등 유리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도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사료 보급소와 휴식처를 설치하겠습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등의 무분별한 사살을 금지하고, 농장 피해 발생에 대한 공공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반려동물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현실화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한 공공적 동물의료체계(의료비 절감 및 무상의료화 등)의 도입을 연계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합정비하여 ‘동물종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광역지방정부 위기동물 응급의료센터를 두겠습니다.



지자체 및 자치구 보건소에 동물보건소를 설치하고, 기본검진 및 치료,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공공적 반려동물보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장려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물권 공약〉

○ 기초지방정부에 동물종합돌봄센터와 동물보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동물종합돌봄센터’ 설치하고 전문수의사의 훈련과 치료 지원
- 동물종합돌봄센터와 연계한 광역지방정부 위기동물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앰블런스 운영
- 취약계층 반려동물 단기돌봄서비스 제공 (반려견, 반려묘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자치구 보건소에 동물보건소 설치
- 기본검진 및 치료,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
- 반려동물의료비 표준 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 반려동물보험 정책 마련
-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동물보건소 기반으로 구축

○ 반려동물 공공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공공장례식장 설치,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설치
- 장례용품 구비 및 온라인 화장장 예약이 가능한 반려동물 장묘 정보 시스템 구축
- 반려동물 장묘업체 대상 관리 감독 강화, 홈페이지 정보 공시, 합리적 비용 등 감독 강화
-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확대

○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동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 보호의 의무를 명시, 나아가 동물의 권리 조항 기재
-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 합의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나아가 동물권리법으로 발전 방향 설정
- 동물의 정의에 문어 등 두족류와 게 등 십각·갑각류 포함
- 식용 목적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제외 조항 폐지
-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 동물청(가칭) 설치



- 동물청은 동물 복지 및 권리 보호에 전념하고 동물보호법의 적법한 집행 감시

○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 방지하고, 공존을 위한 정책 시행하겠습니다

- 야생동물 로드킬 다발 구간에 로드킬 방지 도로 시설(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설치 의무화
- 야생동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설치 확대 및 정비
- 새 충돌 방지를 위해 신규 투명 방음벽에 건축물 스티커 부착 의무화
- 비둘기 모이 금지를 철회 및 개체 수 조절 정책으로 전환
-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을 증액, 사료 보급소와 휴식처 설치
- 고라니나 멧돼지의 무분별한 사살 금지와 발생한 농장 피해에 대한 공공 보상 체계 구축
- 국토종합계획에 야생동물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완충지대 조성 등 포함

○ 동물원 말고 생추어리! 동물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생추어리를 「동물보호법」 등으로 입법화
- 사육곰 산업 폐업지원 및 전량 매입 정책을 우선 추진
- 지자체 및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추어리 및 지역별 돌봄 네트워크 구성
- 현재 있는 동물원의 성격을 생추어리로 단계적 전환
- 외래 생태종 관람에서 토착 생태종 보전으로 점진적 변화 추진
- 동물원·수족관·동물체험시설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 살처분의 근본적 대안 마련과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하는 유예 기준 명시
- 살처분 2차 오염 관리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가축전염예방법, 동물보호법)



- 공장식 축산업에서 분만틀, 감금틀, 분쇄기 등 사육방식 금지
-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 마련
- 주요 도축장에 동물복지 인증 기준 의무 적용 및 설비·운영 지원 및 수의사 의무 점검
- 동물복지 담당자 지정 및 동물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축제를 폐지하고 동물학대 예방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산천어 축제, 투우 소싸움, 동물 축제 폐지, 마차·기마대 폐지 및 은퇴 경주마 보호
- 동물학대로 중상해, 살해 사건시 최소 형량 규정 및 실행 처벌, 동물사육금지
- 동물학대 재발방지와 교육 프로그램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
- 동물학대 발생시 최종 판결 전 동물과 격리조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동물실험 폐지를 목표로 대체시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물실험 폐지를 목표로 실험의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수립
-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및 민관협력기금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



3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 기후·에너지 전환
- 교통
- 생태환경



기후·에너지 전환

〈2025년 5월 7일 기후 공약 1차 발표〉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의하는 일, 그것이 기후정치가 할 일입니다.”

오늘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21대 대선 기후 정책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과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할 것입니다. 사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토목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후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어떤 기후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서는 기후를 말하지만, 바로 그 뒤에서 불필요한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을 늘어놓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산업 성장을 위해, 낡은 원전을 계속 돌리고 심지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거리 송전시설의 문제와 막대한 비용을 알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후정책이 그렇게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기후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이제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회구성원과 합의해 나가는 일입니다.



다. 그것에 맞춰 국가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시민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나가는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기후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목표를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로 새로이 정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외쳤습니다. 과거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의 선순환이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의 기후정책을 국정 의중심에 놓겠습니다.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를 신설하고,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전문 국정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시민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난제를 해결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상향하겠습니다.

탄소포집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과하게 의존하고,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을 누락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을 전면 재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핵심 정책을 혁신하여 발전·산업 등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60%를 달성하겠습니다.



2030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를 금지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까지 탈핵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 만료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수명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넷째, 녹색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경제규모 4%의 녹색투자를 통해, 전력 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20만호 이상의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무상교통 전면실시에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녹색규제에 나서겠습니다.


산업발전도 에너지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AI 지원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설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이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입니다.

여섯째, 시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법」을 제정하고 지역별로 발전노동자와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일터를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와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덥다법」을 제정하여 폭염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과 휴가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생태직불금을 지급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생태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의 74%가 자신의 일터를 폐쇄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텀블러 이용,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진짜 기후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기후 공약 2차 발표〉

기후대응의 방향을, 기후정의로 돌아왔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넘어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43.5%를,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이들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급속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역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들은 공히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후대응을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오염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온갖 특혜와 재정적 지원을 몰아주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기후파괴행위를 면책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역대 정부들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경작과 어획량이 줄어드는 농어민,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 산불 피해자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후대응의 방향을 돌아왔습니다. 기후정의 원칙아래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공공 정책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첫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송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후와 학과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상향해야 합니다. 한국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후대응의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조치는 석탄발전소를 2035년 이내에 신속히 폐쇄하는 것입니다. 발전공기업 5개사가 대부분의 석탄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기업들이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을 목표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중단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탈탄소화 과정은 불가피하게 산업과 노동,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입법으로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폐쇄와 제철/자동차/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충고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은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기후정의세’)를 통해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해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

매일 막대한 양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감축하여,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계획된 진부화' 관행에 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제를 도입, 강화하겠습니다.

AI의 등장과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위협합니다.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를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과 물 수요 폭증을 불러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은 민간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 민영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에 의한 해상풍력 추진을 규제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막대한 민영화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로 더욱 취약해진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후정의세로 조성한 대규모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에너지, 주거, 교통, 의료, 돌봄, 교육의 녹색전환을 이루



는 동시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전력과 가스 등 모두의 필수적 에너지 소비량의 이용 보장, 성능이 강화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역의 공공교통 강화와 승용차 이용 축소를 추진하고, 새로운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유해 폐기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공공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산업시설과 새로운 개발사업을 검토함에 있어 주민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농어민,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의 피해에 국가가 직접 응답하는 재난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한 싱크홀과 지하차도를 포함한 침수위험지 등 재난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폭우나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나 언어 등 다양한 배경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너무덥다법’ 제정으로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맞춘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과 기후수당·휴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교섭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단협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의 생존 조건인 생태계를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태보전지역 지정과 보호를 이행하고, 새만금 등 갯벌과 연안습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의 개발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주요 하천의 자연적 흐름이 막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강이 녹조로 가득차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고,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막힌 강의 흐름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강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개방/해체하고 기후대응을 빌미로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9곳의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지만, 각종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정당화해주는 ‘고무도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를 실효화 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는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비도시권을 비롯한 모든 주민의 존엄한 삶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에 기대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땅과 자산을 가진 소수만 혜택을 받고 다수 주민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이 살던 곳을 떠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 소멸’의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개발에 기댄 성장정책을 중단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시는 물론, 읍/면 단위에서도 도시에 견줄만한 에너지/교통/의료/교육/안전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안정된 삶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른 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 농산물 가격 보장, 농업 재해 대책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업4법을 통과시켜 농촌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동체 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을 탈피해 농지 공유제 기반의 생태농업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집중된 공장식 축산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자 오염원이며, 공장식 축산의 과밀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질병 발생 증가는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침출수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자연과 인간을 위협합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의 실천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큼니다. 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채식선택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소규모 축산업자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공약〉

○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한국발전공사와 민간에너지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금지, 공유지 및 공유시설 중심 태양광 우선 설치

○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및 광산 인력을 재생에너지 등 사업 신설시 우선 고용 명문화
- 원거리 재고용시 5년간 주거 및 교통비 지원
- 전기차 등 전동화에 따른 직업훈련 특별 지원 및 고용전환에 따른 일자리 지원
- 석탄화력발전소 등 폐쇄 및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 지역공동화 막기 위해 발전소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전환 수당 지급

○ 에너지 누진제 강화를 통해 책임있는 소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에너지 사용자 책임 원칙 적용
- 필수사용량 이상의 전력과 열에너지(도시가스 등) 초과 사용분은 누진요금 부과
-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사용량 50% 감축
- 산업용 심야전기로 상향조절, 대기업 농업용 전기 사용 금지
- 기후·에너지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생활 필수에너지를 기본 제공
- 7만 연탄 가구 집중 지역 난방시설 무상 교체, 연탄 연료 제로화

○ 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해 화석연료 사회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 2030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및 신규석탄 발전



소 중지

-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 금지
- 국내 탈화석연료법 제정
- 화석연료산업 부과금 징수 및 초과이윤에 대한 50% 이상의 횡재세 도입
- 민간기업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 금지,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 재 공영화 추진

○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조속한 탈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원자력진흥법 폐지하여 핵발전 확대 정책의 기반 해체
-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 파이로프로세싱 등 일체의 핵 재처리 시도 금지
-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 처분 추진



〈녹색경제 공약〉

○ 산업은행을 녹색경제은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2030년까지 500조 원 녹색공공 투자 추진
- 녹색투자은행이 직접 투자 및 보증하며 자금은 탄소세, 녹색채권 등으로 마련
- 에너지 전환을 주축으로 건물, 교통 등 사회 인프라에 녹색공공투자 도입
- 정부주도로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기술, 새로운 전력 그리드 기술 등 녹색 혁신
- 지능형 전력망 재구성 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전력망 구성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확대 및 연가금 녹색 정의로운 녹색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산업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으로 완전히 개편
- 정부 지원을 통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
- 배터리 산업 육성, 미래 에너지 저장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 지원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해당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보장

○ 지역 경제의 녹색 부흥을 위해,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30만 개, 녹색주택 10만 개, 스마트그리드 10만 개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공동체, 돌봄 등에서 공공지원 일자리 보장제로 돌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지역공동체 중심의 녹색일자리와 사회적 경제가 국가일자리보장제가 되도록 육성·지원
- 전체 고용의 4% 이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중심 녹색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교통

〈2025년 5월 28일 공공교통 공약 발표〉

기후위기와 교통불평등을 넘어, 공공교통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통정책은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을 넘기 위한 공공교통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통정책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적절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공공교통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개발국가의 잔재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운송산업 그리고 ‘가짜 경쟁’이 만들어놓은 KTX와 SRT의 분할, 사라지는 버스터미널과 버스노선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다시 세우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기에 교통정책이 고민해야 할 방향을 생각합니다.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8가지의 공공교통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통기본법 제정, 진짜 K-패스의 도입, 고속철도 통합 및 간이역 확대, 현행 운수사업법 전면 개정 및 준공영제 폐지, 자전거 보행의 교통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사업 지원 강화, 임기 중 대중교통수단분담률 10% 높이고, 보행자 안전사고 0%로 줄이고, 잘못된 탄소보조금 전면 폐지 및 전환을 발표합니다.



첫째,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이동권을 새로운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시민들의 사회적 삶에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버스 노선과 사라지고 있는 터미널로 인해 전국 곳곳에 ‘교통이 없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중교통은 점점 어려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교통관련 법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교통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의무를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5만원, 비수도권 3만원의 정액 정기권으로 ‘진짜 K-패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편리하고 유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행 K-패스는 복잡한 환급 방식이어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보장폭이 적어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자의 유입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는 독일티켓과 같이 정액 정기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K-패스의 지역 이용률을 기준으로 교통인프라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목적 교부금 등을 통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진짜 K-패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지로 분할되어 있는 고속철도(KTX, SRT)를 통합하고, 지역의 간이역을 지키겠습니다.


철도 운영환경을 도외시한 현행 철도 분할은 ‘가짜 경쟁’을 위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병목구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운행계획 조차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행 (주)SR을 한국철도공사에 합병하여 고속철도 운행 주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의 운행 체계를 개선하고,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 할인을 확대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간이역을 유지, 복원하여 철도가 광역교통수단으로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가 단순히 철도운영기관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준공영제’를 넘어서 ‘공영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치해온 사업자 법인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버스면허의 갱신 및 일몰 절차 마련, 2000년 이후 정책결정에 의해 신설된 노선에 대한 공공인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버스사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초기 인수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용자하고, 이를 위한 정원 규정의 유예, 차고지 규정의 완화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주민협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 버스를 신규로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버스업체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하여 정산의무를 부여하고, 보조금 횡령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고 반복할 경우 면허 취소를 하며, 면허 취소에 따른 한시적인 사업 명령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한



업체를 퇴출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중요한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은 여전히 교통정책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이동은 보행과 자전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만나는 핵심적인 연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수단으로 통합하고, 이를 위한 일괄적인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통행 중심의 구조를 자전거와 보행자와 동등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형식적인 녹색교통 정책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할 경우 자전거 고속도로, 지상트램(기존 도로 점유방식) 등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의 도입을 지원하고 그와 함께 구체적인 자가용 통행 감소목표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ی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신청 경로에서 지역주민들의 신청 방식을 보장하고,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과 연동하여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지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일곱째, 임기중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0% 확대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제로’ 를 핵심적인 정책지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32%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자전거와 보행을 포함하여 42% 수준까지 임기내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교통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는 ‘제로비전’ 을 핵



심 과제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대인 사고에 대한 패널티 강화, 이를 위한 현행 도로신호 체계에 대한 관리 권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 주변 등 안전관리 참여 주민에 대한 권한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잘못된 교통 분야의 탄소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상화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주요 영업용 차량의 탄소 연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온 유가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화주가 정당한 부담을 질 수 있는 ‘공정운임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도 복원하여 지역 교통투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10차례 넘게 연장되어온 유류세 감면 역시 정상화하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도로에서 공공교통(철도, 지하철, 버스 등)으로, 신규 건설에서 유지 개선으로, 신기술보단 안전한 적정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교통 공약〉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K-패스’ 를 도입하겠습니다

- 노인, 청소년, 장애인, 농어촌 지방정부 무상교통 우선 도입
-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

○ 탄소배출 줄이는 공공교통 확산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교통기본법을 제정, 개별 분산되어 있는 교통 관련 법 통합
-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원칙 수립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 ‘시민교통정책위원회(가칭)’ 구성
- 자전거 전용도로와 ‘태양광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도로 확대

○ 버스·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하여 버스 노선 운영에 사모펀드 진입 방지
- 대중교통공영제 운영에 시민, 노동자, 전문가의 경영 참여 보장
- 공공철도를 확충하는 지역맞춤형 철도중심 교통 인프라 구축
- 교통소외지에 공영버스 우선 도입·확충
- 신규 100%를 전기버스로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제로’

○ 교통사고 ‘사망 제로’ 교통계획을 만들겠습니다

- 자가용 수요 축소,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 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
- 2030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업용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
- 지방 대도시, 수도권 등에 트램, 대용량 공공교통수단(S-BRT, BTX) 도입



- 국내선 항공노선 통폐합하고 태양광 발전·숲 조성하며 신규 공항 건설 금지
- 광역 간 철도 확장하여 지역 내 공공버스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성

○ '자전거면 충분하다' 자전거 생태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수송분담률 목표 명시
- 자전거 주차장 수 증대
- 공공교통 환승 터미널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 공공자전거센터(자전거수리센터 및 방치자전거재사용센터)
- 자전거 공방 협동조합 등 자전거 수리 및 유지 관련 정책 지원 확대

○ 사회연대 재정원칙과 기업교통세로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 규모에 따라 기업교통세 신설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 공항, 항만 계정 비율을 30% 이하로 대폭 축소

생태환경

〈생태환경 공약〉

○ 그린벨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복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추진
- 이탄지 및 습지 복원, 화학살충제 사용 감소, 도시공간의 녹지 순손실 중단 등 포함
-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의 30% 이상 확대, 훼손 지역의 30% 이상 복원 목표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제3기관이 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부당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실시된 사업 전면 중단 및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의 책임 부과
- 환경영향평가의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여 상시 공개하고 소수자 접근성 보장
-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
-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주민 및 제3자 참여와 이의신청권을 보장, 승인철회 절차 보장
-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제기 원고적격의 범위와 대상 확대
-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TEIA)를 도입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
- 환경영향평가의 조력자 제도 도입 및 자연의 권리 대리인의 방어권 (거부권) 보장
- 환경 파괴·생태학살 토건사업 중단

○ 자연과 동식물에 생태법인을 지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생태법인 제도 도입으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
-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
- 동물권과 자연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정책-조례의 입법 선순환 구조 구성
- 누구나 자연 보호를 위해서 자연을 대리한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 확대
- 대규모 건설·군사 시설 등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의 대리인 참여 제도 신설

○ 녹색범죄와 생태학살(Ecocide)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비준국으로서 로마규정 개정을 통한 에코사이드 처벌 찬성
- 「생태학살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민형사상 책임 강화
-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지르는 경우 사법부에 중단 권한 부여
- 생태학살 피해지역 회복과 되살림을 위한 생태학살재생기금(환경범죄피해기금을 전환) 조성
- 녹색범죄 생태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위원회 개설
-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을 ‘환경범죄 합동수사단’ 으로 격상하여 환경범죄 대응 강화
- 환경범죄 피해자의 소송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총리실 산하 범부처 TF 신설
- 환경범죄 소송에서 법정 조언자의 참여 보장

○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및 매장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 국제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협약 논의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및 감소 정책 도입
- 국내 석유화학업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및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 
- 모든 공공기관 및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과 종이컵 사용 금지
 -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식수대 회복, 설치 확대

○ 해양·육지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폐기물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발생지 책임원칙에 기초한 폐기물의 농촌 집중화 근절
-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하고 민간 매립과 소각시설 설치 관리
- 유해폐기물 수출 감독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 상 요구 지속
- 정부의 원전 폐수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백지화와 2040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전면 폐기

4

돌봄 걱정 없는 나라

- 돌봄
- 보육
- 복지·연금
- 의료



돌봄

〈2025년 5월 29일 돌봄복지 공약 발표〉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은 아직 부재합니다. 이는 돌봄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무상급식을 만들어낸 민주노동당이 무상돌봄의 시대와 새로운 복지 체계를 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둔 돌봄사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사회, 공공이 주도하는 돌봄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돌봄의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시군구 돌봄 책임제로 기초지자체가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돌봄은 수요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합니다. 찾아다닐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그대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가까이 사회서비스를 민간 공급자에게 의존해오면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돌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시군구에 나를 전담하는 돌봄담당자가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사무범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전면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돌봄과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사무는 광역지자체나 국가 사무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한



돌봄 전문 공무원으로 기초지자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돌봄매니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꼬리표를 달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돌봄 예산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보조금과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요양, 보육, 활동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의 비중을 최소한 30%부터 시작하여 늘려가야 합니다.

둘째, 시민최저소득 보장으로 절대빈곤을 없애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은 약 15%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에 불과합니다.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방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면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최소한 중위소득 50%(약 12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50%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음의 소득세 방식)

셋째,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양한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기반을 둔 과거의 사회서비스 체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없이 전면 적용하여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4대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노무 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



퇴 등 어떤 경우라도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평생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서비스의 공공화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돌봄, 의료, 주거, 교육, 교통을 5대 필수서비스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서 비용지원, 공영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운영 등을 통해 공공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은 시군구 돌봄책임제로, 의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주거는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로, 교육은 무상대학교육으로, 교통은 무상공공교통으로 시민들의 생계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배분과 정부의 돌봄복지 정책에 의한 적극적 분배로 가능합니다. 시군구 돌봄책임제,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4대 보험, 필수서비스의 공공화로 어떤 처지에 있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돌봄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봄 공약〉

○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국회 산하에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 국회, 정부, 시민사회 계 등 참여
- 위원회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 선정
- 선정된 우선 과제는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하여 통합돌봄체계를 총괄하겠습니다

- 돌봄에 관한 예산 편성 권한 부여
-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사회서비스원 강화,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돌봄서비스 종합지원 체계 마련
-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 범위 확대
- 공공 돌봄플래너가 서비스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꼭 맞게 제공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 시군구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생애통합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시군구 ‘공공돌봄센터’가 어르신, 장애인부터 요양, 돌봄, 활동지원 직접 제공
- ‘공공돌봄센터’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돌봄, 긴급 돌봄 제공
-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 고용



○ 생애주기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모두의 마음 건강을 돕겠습니다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군구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특화 상담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사로 연계

○ 건강관리 만점! 전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협동 조합형, 자발적 등록형 등 다양한 시범 사업 추진
- 노인, 장애인, 영유아 대상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다양한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전국민주치의제 시행

○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 적용
- 질병, 손상으로 인해 경제활동 불가능할 시 소득의 70% 보상

○ 사회적 대화에 기반해 조력존엄사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확대, 생애 말기 돌봄 재가 간호서비스 제공
-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한 말기 환자, 자발적 의사, 진료 거부권 보장
-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방안 등까지 포함해 사회적 논의 시작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으로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 확보와 직접계약 원칙의 명문화
- 공공 재가서비스 종사자부터 월급제 도입, 돌봄노동자 전반으로 확대
- 돌봄노동자 직무가치, 경력, 숙련을 반영한 임금기준, 교육훈련제도 마련
- 사용자 의무 조치 등을 구체화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종사자 대책’ 마련



○ 주거·보육·재활 3대 인프라에 연기금 10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연기금을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투자로 과감히 전환
- 주거·보육·재활 3대 인프라 100조 원 투자로 저출생 해결, 연금 기여 대상 확대

〈보육 공약〉

-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임신·출산·산후조리를 100% 지원하겠습니다
 -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병행 설치
 - 집에서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 아이돌봄 3종 세트, 키움센터·아이돌보미·장난감도서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중앙정부 예산 지원으로 확대 강화
 - 지역마다 장난감도서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활동가 처우 개선

-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낮은 지역에 중앙정부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초등학교 유휴공간, 공원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민간어린이집 매각, 리모델링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친환경 어린이집 자원과 친환경 급식 제공 보육교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이후 유치원 수준으로 임금 인상
 - 교사 1명당 아동 비율 축소, 보육교사 확충으로 업무시간, 휴게시간 확보

-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시군구마다 아동전문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심리·아동발달전문 센터 운영
- 아동전문상담가가 보육교사들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지도, 상담 제공
-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환경 진단 및 리모델링 지원
- 저소득층, 아동학대 피해 등 아동/가정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복지·연금

〈복지연금 공약〉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대상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남아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결혼이민자에게도 생계급여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위기준소득 인상
- 자활급여 인상 및 자활공동체 지원 확대

○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돕겠습니다

- 사회복지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보장
- 민간위탁·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 인력 확충
- 모든 사회복지종사자 적정 인건비 기준 단일 적용
- 미설치 시군구에 사회복지관 설치,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개보수 지원확대
- 사회복지 현장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 행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인상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보장성 확대
- 국민연금에 조세 투입으로 정부의 공적책임 강화
- 국가 책임 명문화로 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일치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 돌봄크레딧 도입, 군복무크레딧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등 사회적기여 보상 강화
- 노인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해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
- 기초연금 대상범위 축소를 저지하고, 급여수준 50만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인상에 발맞춘 기초연금 인상
- 초고령자 대상의 노후최저보장제도 실시
- 부담능력에 따른 사회보장재정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사용자 책임 강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국민연금 책임 강화
- 거대 플랫폼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과
-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실물자산(사회 인프라) 투자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5년 5월 21일 보건의료 공약 발표〉

이준석 후보가 오늘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했습니다. 이곳이 이재명 후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을 이준석 후보는 오직 정쟁과 ‘말꼬리 잡기’를 위해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 치졸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게 된 것은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 방기와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신상진 시장이 철저히 외면하는 진실을 권영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권영길의 민주노동당이 추구했던 무상의료 운동, 권영국의 민주노동당이 이어받았습니다. ‘제2의 무상의료 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 돕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건 비용이라고 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런 명쾌한 지적은 멀리 남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출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 권영국은 전국 방방곡곡 500병상 공공병원 100개 확충, 전국민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로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돌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실패로 끝난 윤석열표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통행 정부와 강경일변도 의사들 간의 대화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적인 의사 숫자 확충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공공의료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정책 묶음입니다.

둘째, 전국 방방곡곡, 우리 동네마다 든든한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의료 지역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경기동북부 등 추진 중인 공공병원 설립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지역주민을 지키고, 민간병원이 못하는 지역사회돌봄, 장애인, 재활, 노인돌봄, 어린이, 산전산후 모자돌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립병원부터 공공병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한 공



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90%에 달하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이용체계 혁신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여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인 공급하고, 국가혈액본부를 설립하여 전국민 무상수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민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살인’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의료 강화를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 가족 주치의제, 노인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재택의료 활성화, 노인의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돌봄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요양병원은 품질 관리 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문제, 간병파산, 간병살인, ‘노노간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로 병원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앞부터 무상의료운동의 성과를 살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정부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적으로 법정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의료와 돌봄은 사람이 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200만 보건의료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간호사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인력확충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통해 자긍심 넘치는 국민건강돌봄 지킴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함께 잘사는 나라

- 민생
- 경제민주화
- 공정금융·지역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상공인·자영업자〉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을 실시하겠습니다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 조성하고 부채 100조 원 매입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현행 부채탕감 제도개선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배달플랫폼과 공정배달로로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습니다

- 온라인쇼핑몰과 경쟁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 형성과 공정배달로 산정
- 배달플랫폼협동조합 설립과 이를 위한 정부의 초기 지원
- 도매 시장의 경우 전문배송시스템 구축
-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교섭권 강화, 체크카드 수수료 완전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가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10%까지 확대
-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투명화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세 납부 등 활용범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통합

○ 골목형 상권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현행 2,000㎡ 이내 점포 수 30개에서 20 개로 완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시행



-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 제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일제 2일에서 4일로 확대
-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보조 및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최저임금 보조
-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대보험료 지원
-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 상병수당을 건강보험 기금 또는 별도 기금으로 조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임대료 완화 추진하겠습니다

- 가맹 및 대리점 조기계약 조건 완화
- 임대료 3개월 미납시 조기계약해지 가능
- 한국감정원 등에 심의 역할 부여
- 가맹점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부여
- 가맹점 본사 협의요청 거부 제재 강화 및 조사·처분권 지자체에 부여
- 대리점 계약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단체 교섭권 도입, 본사의 대리점 계약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을 실현하겠습니다

- 임대료 상한제 도입(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 임대료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상한선(24%)을 시중은행 금리의 1.5배 로 완화
- 환산보증금 폐지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규정 폐지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인상 및 지급 보장
- (준)대규모점포 입점상가, 전통시장 등의 임대차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켄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 소상공인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정
- 지역재투자기금 조성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배제 해소
- 대형유통점은 지역재투자 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
- 광역지자체 소상공진흥공단 설립의무화와 거버넌스 구축

○ 온라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겠습니다

-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 이해충돌행위·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 알고리즘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및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장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서,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에 명시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을 통해, 알고리즘 관련 차별 시정 조치
-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 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컨설팅, 기술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과 자연 및 사회 재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회 용기 사용금지 기간 연장에 따른 재활용 및 다화용기 제작업체 보상 체계 강화
- 소형 배달업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보급’ 확대 지원금
- 소상공인 태양광 설비 지원 및 ‘에너지바우처’ 도입
- 카센터에서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 등지원
- 전국 가구 녹색 리모델링 1,000만 원 지원
- 쿠팡 등 유통업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활용시스템 재구축
- 요식업, 배달업 등 다화용기 사용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상을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까지 확대
- 풍수해 보험 가입률과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보상 한도 현실화



경제민주화

〈2025년 5월 20일 경제 공약 발표〉


‘재벌 대기업-불로소득자 위한 한국경제’ 를 갈아엎고, 공공성에 기반한 민주적-생태적 경제로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심화하는 자산-소득 불평등, 일해도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 빚에 저당잡힌 삶, 120만명이나 되는 청년실업,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기후부정의... 한국경제가 낳은 민생 파탄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경제가 ‘모든 이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 이 아닌 ‘이윤과 경제성장’ 을 위해 돌아가고, 경제 운용을 기업과 국가관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벌-불로소득-경제성장 중심의 한국경제’ 를 지구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민생위기, 돌봄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 서고, 경제운용 결정에 노동자·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 구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국가책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이후, 1500만 명이나 되는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불안정노동체제’ 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복지에서 배제되면서, ‘일해도 빈곤한’ 노동자 또는 실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 원인이 바로 이 ‘저임금-불안정-무권리 노동’ 의 확산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조법 개정으로 누구나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하겠습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공공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안전·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을 제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고 각종 적용제외를 폐지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등으로 성별 격차를 없애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벌 대기업-부자-상속·증여세 중과세’로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 대기업-불로소득-상속·증여세 중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을 90%로 상향하겠습니다. 상속·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수탈하며, 탄소를 다배출한 결과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상향하겠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즉각 시행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전면 환수, 토지 보유세 인상, 재벌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제도 철폐,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서비



스세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누리는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산업 공영화’ 를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긴 결과 주거·교육·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삶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수재는 ‘공공’ 이 그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령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끝내고, 녹색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토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불평등과 응급실 뱅뱅이같은 의료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국내외 대기업이나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필수재인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산업을 국가·지자체·사회적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저렴한 가격(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이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하에 공공성 원리로 운영되도록 하며, 당장 3대 무상(무상돌봄·무상간병·무상교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와 자연자원(바람, 햇빛, 물)에 대한 ‘공개념’ 도입으로, 토지와 자연자원이 사익 편취의 수단이 되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확장재정과 공공투자로, 국가책임 돌봄·복지, 기후정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최종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 건정성 논리에 따른 긴축재정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다하는 ‘확장재정’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벌 퍼주기예 치중된 재정 지출을 멈추고, 국가 책임 돌봄·



복지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국가재정법을 개정’ 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박탈 및 독립적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으로 ‘국가예산의 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로써 필수산업을 공영화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며, 기후/돌봄/생명안전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적극적 공공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 농업재해 대책 등으로 농업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식량안보 확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복지 예산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지자체별 격차가 없도록 하고, 예산은 국가가 집행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벌체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재벌은 필수산업·기간산업과 제2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자, 한국의 경제·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불안정노동체제를 낳은 주범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이며, 화석에너지산업 투자와 난개발,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다배출하는 기후악당입니다.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자영업자 생존권 침탈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GDP 대비 59.7%, 30대 재벌은 91%를 차지하며, 2022년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약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재벌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내 의무매각 및 소유 금지,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의 재벌매각 중단 및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공영화, 금산 분리 등으로, 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제어하겠습니다. 현 금융지배 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조업으로 확대 적용해, 재벌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재벌총수일가의 탈법적 주식 지분(일감몰아주기,



지분확대 목적 기업분할)을 소각하며, 재벌 총수 범죄수의 환수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총수일가의 불법 경영세습과 사익 편취행위를 금지하며, 플랫폼 독점기업을 규제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국은행법 전면개정하고, 금융의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가계가 금융에 포섭되면서 금융재벌(금융지주)들은 가계대출로 돈을 버는 ‘약탈금융’이 일반화됐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서민은 ‘빚에 저당잡힌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대신 금융재벌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필수재의 공공적 공급으로 빚에 저당잡힌 삶을 끝내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전면개정으로 한국은행의 운용목적은 고용안정과 국민생활 보장으로 명문화하고, 한국은행을 운영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고리사채를 무효화하고,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금융자본의 조기 철수시 벌금제 도입, 투기자본(사모펀드, 헷지펀드)의 주식 소유 제한 등으로 투기자본을 규제하겠습니다.

[민생금융 공약]

○ 현행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신청조건, 신용거래 패널티 조항 등으로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새출발기금을 개선
- 부채탕감을 우선적으로 추진
-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소요 기간 최소화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대출자 폐업 시 부채탕감
-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신설
- 전국 고등법원권역인 광주, 대구, 대전에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 전국 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부서 신설 (광역시 → 기초 단계적 확산)
-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 한계채무자 회생을 위해 파산회생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파산 후 당면면책, 파산 후 당면복권 기간을 5년으로 단축
-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도입
- 채무자 대리인으로 시민단체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 모든 채권 추심자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야간 추심 등 인권침해 추심 금지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행관리, 소상공인 재생 프로그램 개발
- 정부(중소기업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민간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각 정당 등으로 구성

○ 가계부채는 원칙대로 관리하고 서민정책금융은 확대하겠습니다


- 빈곤층을 위해서 2천만원 한도에서 압류 방지 통장(생계안심통장) 개설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가계부채 총량 축소 계획 및 관리 지표 등 마련 후 정기 공개
- 전세관련 채무, 신용대출 등이 DSR에 포함되도록 정비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
-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 서민정책금융상품 예산 확대

○ 약탈적인 대출 관행을 규제하겠습니다

- 「대부업법」 · 「이자제한법」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 및 무효화

○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 및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 낙하산 방지 법률 마련
- 노동이사제 · 사외이사 추천제도 법적 제도화
- 금융당국의 편향적 · 무분별 규제완화 철폐
- 금산분리 원칙 수호를 위한 법안 마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관리 · 감독 기능 분리
- 독립적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금융지주 경영진과 지주사 및 자회사 등 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내부 통제 입법
- 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 행위 등 부실 발생 경우 손해 배상 청구
- 금융통화위원회에 국민대표 위원 2명 포함

- 
-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금융노동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점포폐쇄방지법 입법
-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전면 개정
- 금융산업 현장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조기 도입

○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특혜를 「은행법」 수준으로 동일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서 디지털플랫폼기업들도 금융기관의 규제를 적용



〈지역경제 공약〉

○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
- 지역 민간금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 지역 금융배제 해소 및 저소득층 자금 지원
-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금융 지원
-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금융 지원
- 주거·의료·돌봄 사회서비스 및 공공플랫폼형성
- 지역화폐와 지역골목상권 지원
- 청년 학습 및 사업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지역순환경제 5법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녹색 돌봄경제투자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및 금융배제의 해소와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
-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을 제정해 대규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지역적 규제를 강화해 지역에서 창출된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납세, 정책자금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2차 이상 재사용 허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통합
-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조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순환’ 등 지역 공공사업의 지역사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기업과 같은 사회연대경제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제정
- 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전용 기금 조성해 사회적금융 및 시민자산화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 협동조합의 보험·금융·공제 등에 대한 제한 철폐 및 확산 지원
- 일자리보장제와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력 파견 및 육성
- 사회주택, 지역사회돌봄, 의료사협 등 사회적경제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 모델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

〈2025년 5월 18일 플랫폼규제 공약 발표〉

플랫폼 기업 독점의 시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술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메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모두 플랫폼 기업 찬양 일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장악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노동을 외주화하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들은 노동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는 어떻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극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더욱 심각한 시장 독점으로 이어집니다. 편리성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시장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한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수’를 표방하면서, 불안정 무권리 노동자들의 현실이나 시장 독점의 폐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인 저 권영국은 무소불위 플랫폼 기업에 제동을 걸



고, 플랫폼 서비스 곳곳에 스며든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겠습니다. 노동이 소외되고 소비자권리가 외면받는 플랫폼 독점을 타파하고, 플랫폼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엄연히 플랫폼에 의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종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권리를 갖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업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추풍낙엽처럼 해고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갈아엎기 위해, 불공정 해고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쿠팡 방지법(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이동 제한 등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동종 업계 내 플랫폼 기업 간 M&A가 이뤄질 경우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부여하고, 계열분리와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점업체-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갑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수수료의 배분 구조도 모른 채 부담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플랫



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단체 구성 및 협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상한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수수료 결정·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를 표준화하며,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해 실질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배달료의 현실적 인상과 배달료 체계 변경 시 노동자와의 사전 협의와 교섭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블랙박스에 갇힌 플랫폼 노동자의 알 권리, 알고리즘 투명성을 통해 보장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일감배정 알고리즘, 등급 알고리즘, 제정정치 알고리즘, 가격결정 아목리즘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인사 결정에 대해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노동자들이 동화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또, 검색 결과·노출 순위, 광고 여부, 이용 후기 신뢰도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맞춤형 광고, 인기상품 추천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출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일곱째, SK방지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강화)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전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지·신고, 피해자 구제,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동의 철회·정보 삭제·정정 등 통제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AI규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실이 된 AI 정책, 돌아왔습니다.

발명의 날을 맞아 AI 분야 공약을 발표합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기후위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시기에 노동자,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진보적 대안이 필수적입니다.

AI 발전이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향이 불명확한데도, 세계적으로 자체 AI 개발이 경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AI 실업’은 이미 우리 눈앞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담수 소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딥페이크, 생성형 AI로 인한 성착취와 민주주의의 위협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미 AI 기본법이 제정될 때 규제는 뼈대만 남기고 사라졌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일색의 정치는 대규모 투자만을 얘기하고, 규제 해제만을 얘기합니다.

기술의 목적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저 권영국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AI 규제 공약을 선보입니다. AI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 시민, 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규제가 빠진 무분별한 투자에 방향타를 달고,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AI 공약이 사회적 논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우선하겠습니다.

AI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 발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입니다. 일반 시민이 함께 하는 ‘범시민 AI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 숙고 과정을 통해 AI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하고 AI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재확인하겠습니다. AI 교과서 줄속 도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AI 기본법을 개정해 시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고위험 AI 개발을 원천 금지하고,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 예외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악영향 위험이 큰 AI와 공공부문 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향 받는 자’ 누구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환경 의무를 두겠습니다. 시행령 제정 논의에 배제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법, 행정 등 공공 부문과 취업, 안전관리의 영역에서 인간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AI 시대에 더욱 취약해진 노동자, 창작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AI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확장하고 향후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AI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기후정의세, 디지털플랫폼세 등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기업의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와 설계·운영 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이 AI의 ‘자투리 노동’을 전가당해서도 안 됩니다. 실직과 과로를 포함한 고용·노동 AI 영향을 평가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기업이 동의 없이 AI 학습을 위해 이용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제작·라벨링·가공 등 보이지 않는 ‘유령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히 콘텐츠 분류 노동자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규



정해 플랫폼노동자·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 노동자들입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AI의 창작물 사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정 작품을 모방한 AI 산출물들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AI 생성 산출물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18일 ‘SK방지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강화)’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루다 사태’와 같은 AI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는 콘텐츠는 명시적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AI에 학습시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AI 생태계와 데이터센터를 정의롭게 대전환하겠습니다.

AI 산업 지원은 시민들의 편익과 공공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공공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고, 정부가 투자한 인프라 활용에는 합당한 공공성 요건(노동권 보장, 환경기준·윤리성 준수, 산업·연구 생태계 기여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결과물을 개방하거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 신청을 우대하여, 오픈소스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등을 대규모로 제공할 경우에 고용 약정·시민감사 수용 약정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AI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이터센터 산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로 무분별한 성장을 억제하겠습니다. 신규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가 전력·물·생태·지역사회 등에 끼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일정 부분은 비영리 연구나, 사회적기업·시민참여 공공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연구노동자들이 기술 개발의 주역입니다. 연구원 중심의 과제 선정·집행 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 40시간제 적용 예외 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넷째, AI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규제 기준을 확립하고, 차별·편향을 강화하는 AI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시정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을 망가뜨리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AI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제 AI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기본 협약’에 가입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를 퇴출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생성형 AI 시대에 맞추어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대응을 위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한 ‘성평등부’ 산하에 설치할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에 AI 분석 기능을 넣겠습니다.

기술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 이해와 권리 중심의 AI 문해력 교육을 초·중·고·대학·평생교육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 AI 교육센터(도서관, 주민센터 등)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공약〉

○ 윤석열 정부가 초토화시킨 연구현장, 복구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조사, 복구 계획 수립
- 전체 예산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
- 국가 R&D 예산안의 변경에는 전문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 정비
- 연구현장 다양한 주체와의 지속적 소통 방안 마련
-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강화하고 연구자 생애 주기별로 구분을 단순화
- 급증한 ” 글로벌 R&D 예산” 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히 손질
- 예타 면제를 대체할 전문성 있는 검토 방안 마련

○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정의’ 등 국가 목표를 고려해 대덕연구단지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 위 재정립
- 재생에너지 및 미래 에너지 저장 기술 육성
- 연구부정행위 근절, 남발된 ‘도전형’ 연구에 대한 견제 방안 마련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녹색기술 혁신 추진하겠습니다.

- 태양광과 풍력 핵심기술
- 첨단 배터리 기술혁신
- 전기차 시대 촉진
- 그린수소 혁신
- 생태농어업 기술혁신

○ 과학기술자치 실현 : PBS 폐지, 연구비 70%는정부 책임으로

-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해 연구현장의 자율성 확립하고 활력 부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과학기술자치 대표자로
- 출연연 연구비의 70% 이상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
- 연구자 인건비를 부문별로 70~100% 보장(연구비 지원은 NST가 총괄 관리)
-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확대
- 부실 R&D 단계별 평가지표 작성(지표, 계획, 목표, 수요창출 등을 중심으로 수립)
- 기존 R&D 과제에서 선후관계, 문제점, 개선방안 정밀분석

○ 기초과학 투자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 정부 R&D 지원예산에서 일반대학연구진흥금(GUF)을 1차적으로 20%까지 확보
-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 확충을 6만명 이상(전일제 환산 기준)
- 지역 거점 국립대를 기초학문 진흥의 기반으로 하기 위해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마련

-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일하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
- 해외에서 온 이공계 유학생에게 안정적 거주 보장

○ 시민의 일상 속으로 ‘누구나 과학기술’

-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과학센터’ 상설 설치
- 과학체험 인프라 전반 개선
- 과학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 과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게임 등)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 공약〉

○ 전국민 무상 인터넷 도입 및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월 요금 1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가정용 초고속 유선인터넷 표준요금제 마련
- 국가 보조로 국내 전체 가구에 표준요금제 1개 회선을 지원
- 보편적 무상인터넷을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솔루션 제공
- 이동통신요금 등에 대해 통신사가 원가 및 요금산정 근거 공개
- 5G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MVO)에서 월 2~3만대 보편요금제 도입하고 데이터 10GB 보장
- 통신사에 시설투자액 확대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실제 영업피해규모 기준으로 보상

○ 전국민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가능 인공지능 장려

- 알고리즘 관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를 부여
- 알고리즘 설계 시 적용할 차별 금지,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원칙 보급
- 검색 및 배열과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알고리즘은 주요 내용 공개를 의무화
- 알고리즘 개발자, 수정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 의무화

○ 전자제품에 ‘수리할 권리’ 보장

-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 를 가지도록 제도화
- 전기, 전자, 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수리권 적용
- 수리권 관련 필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
- 바가지 피해 방지 : 수리 비용과 부품 비용에 상한선 부여
- 수리를 주업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육성

○ ‘종이 없는 행정’ 과 탈탄소 기반디지털 전환

- 공공 분야, ‘종이 없는 행정’ 전면화
- 공공 분야 디지털 탄소발자국 평가 제도화



○ IT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IT·게임사가 다수 자회사를 악용한 간접고용을 남발하지 않도록 규제
- 프로젝트 종료를 계기로 한 사직 유도를 척결하고 및 고용 불안 해소
- 자회사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IT·게임노동자의 크런치모드 근절

6

함께 만드는 제7공화국

- 개헌
- 정치개혁
- 사법개혁
- 언론미디어개혁
- 국방개혁
- 외교통상
- 한반도평화



개헌

〈2025년 5월 26일 개헌 공약 발표〉

광장의 모습을 닮은 ‘광장개헌’ 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광장 시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마다의 힘겨운 사연을 말했습니다. 국가와 엘리트들이 망가뜨린 나라에서 헌법의 최종 보루를 자임한 주권자 시민은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광장에서부터 써내려 갔습니다. 불평등, 혐오, 폭력에 대항하는 ‘내란 이후의 세계’ 를 말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대통령 임기 조정에 국한된 논의들뿐입니다. 제가 2024년 12월 3일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석한 광장에서 보고 들은 열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장은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했고, 누가 헌법의 주인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쓰는 헌법은 우리의 권리를, 소수자의 바람을,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확고하고 시민 스스로 새로 쓰는 헌법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직접 법률안·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은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한 것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구 이전에 더 근원적인 헌법 주체는 바로 “대한국민” , 즉 시민들이었습니다.

내란 사태가 폭로한 현 헌법의 미비함을 극복하는 개헌입니다. 당연히 시민



주권의 구체적 제도화를 통해 시민들의 힘을 실체화, 일상화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국회와 정부와 대통령에게만 인정한 권리를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의 제도화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립, 상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중대하고 시급한 입법을 나중으로 미룰 때, 대의민주주의가 정말로 ‘시민을 대의하는 민주주의’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국민이 직접 만드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광장 정신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기본권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헌법의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광장 헌법은 기본권 관련 조항의 주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노동권 관련 조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주의 시선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다시 써야 합니다.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현대적 조건에 맞게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등의 성평등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한다.”

‘근로의 의무’를 규정한 현행 헌법 32조를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 대



체하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도 분명하게 헌법에 새기겠습니다.

셋째, 1987년 이후 지체된 시민의 새로운 권리를 확장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도입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문화권, 소비자의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평생 교육권을 도입하고, 주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먹거리 기본권, 식량주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환경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로 규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시민의 저항권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민주화 원칙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시대 변화에 뒤쳐진 내용입니다. 주주 권리를 넘어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며 기업



의 존속과 장기 발전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정희에 의해 삭제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제헌헌법 1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었습니다. 이를 부활시키되,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장을 닦은 새 헌법! “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광장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87년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세력인 민정당 주도로 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광장을 닦은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시민회의 활동을 보장하며 시민회의 개헌안의 국민투표 발의 과정을 맡고, 인구분포를 반영한 추첨으로 구성된 개헌시민회의는 폭넓은 개헌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구조 대신 시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열겠습니다. 내란은 대통령 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시민 스스로가 확장하는 과정의 깊은 숙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김문수와 국민의힘도, 심지어는 이준석과 개혁신당도 변지수가 틀렸습니다. 내란의 밤을 반복하지 않는 개헌은 시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제2의 윤석열을 방지하는 개헌을 열어가겠습니다.



〈개헌 공약〉

○ 다시는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 제77조 개헌) 평시 계엄 선포권 삭제, 전시·사변시에만 계엄 허용
 - 평시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권 사용(헌법 제76조)
- (헌법 제71조 개헌)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1순위를 국회의장으로 변경
- (헌법 제111조 개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이 지명이 있는 후에도 대통령이 5일 이상 임명하지 않을시 국회의장이 임명,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권(헌법 제53조 준용)

○ 시민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 전문 개헌) 국민 주권의 위대함을 담은 헌정사적 사실과 가치 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 노동존중, 평등사회,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등
- (신설) 국민에게 입법권을, 국민발안제 도입

○ 제7공화국으로 가는 시민참여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준대통령제 개헌 :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 : 헌법에 ‘성평등’ 지향 명시, 남녀동등권 및 성평등 실현 명문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개헌 : 헌법에 ‘탈탄소 생태국가’ 명시, ‘탄소중립 목표’ 명문화
-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권 확대 : 주거권, 돌봄권, 건강권, 일자리보장권 등



정치개혁

〈2025년 5월 26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낡은 정치제도, 모조리 갈아엎겠습니다

한국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구질서의 병폐를 혁파하겠습니다. 민주 헌정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는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주권이 발현되는 제도개혁을 위하여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결선투표제 전면화,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역정당 허용 및 정당성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혁,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혁을 발표합니다.

첫째, 모든 1인 선거구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1인을 선출하는 모든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공직자 선출 시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단체장, 각급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유권자의 권리와 선택을 그대로 존중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스웨덴식)를 도입하여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10만 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시도의회 선거는 가장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써 개혁이 시급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또는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확대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당원 가입 금지 규정, 출마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청소년 시민들의 참정권을 증진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투표 편의를 확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정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20세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로 설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정당의 자율성 보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당법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당이 출현하는 정치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당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local party)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혁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을 서울로 하도록 강제하는 수도권정을 삭제하여, 서울중심의 정치문화를 혁파하겠습니다.

다양한 선거연대와 선거연합을 막고 있는 정당법을 개혁하여, 유럽 등에서 일반화된 ‘선거연합정당’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정당에게 과도한 권한과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도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이 지역구 기준 특정 성별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디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정치자금법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여 선거공영제의 의의를 살리고 청년세대 및 정치신인의 선출직 도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원외 정치인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이 정당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공약〉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를 국무총리로 임명

○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 결선투표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함

○ 정당 설립을 자유화하겠습니다

- 정당법 개정, 5개 시도당별 1,000인 이상의 당원 구성 요건 삭제

○ 지역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 정당법 개정,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5개 시도당별 1,000인 이상의 구성 요건 폐지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현금 자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백지신탁을 의무화
- 직계가족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
-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모든 결정은 (가칭)국민평의원제를 통해 결정
-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엄단
-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 삭감
- 후원 추가 모금은 총선에만 한정,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추가 모금 금지



○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미흡하고 왜곡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
-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로 개혁

○ 교섭단체를 개혁하겠습니다

- 기득권 양당체제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개혁
- 현재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석~10석으로 개혁
- 정당간 연합교섭단체 활성화



〈자치분권 공약〉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하겠습니다

-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 모델 검토를 통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읍장, 면장,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 읍장, 면장,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며,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천제 등 실시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2%)—특별교부세를 재난안전교부세로 전환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한 재정확충
-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단서 삭제



○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 를 신설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및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 사무 확대 및 이원화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및 권 전문가 포함 강행규정화
- 경찰 출신 위원 비율 제한 및 상임위원 선임 배제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호선제로 단체장 입김 배제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재원 및 인력을 동반한 사무이양 추진

사법개혁

〈사법개혁 공약〉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 및 퇴직 시 변호사자격 자동 상실
-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3년 임기로 순번제(임명일-성별-연령 순)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 평판사가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 설치 및 법관 인사권 단계적 이양
- 고등 및 지방 법원장 평판사 선출제 도입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교수와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임명제청 의무화
- 헌법재판관 전원 국회 임명동의 절차 의무화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확대(3인 → 5인)와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특정 성별 60% 이내로 제한
- 판사와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50% 이내로 제한

○ 국가수사체계 개편을 완성하겠습니다

-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기구 설치
- 공수처, 검찰의 수사·기소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과 내부 심의, 통제 내실화

○ 민주적 군사법제도를 실현하고 군인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평시 보통군사법원 폐지,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 군검찰의 관할을 순정 군사범죄로 제한



- 동성 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92조의6) 폐지
- 신체검사·군인사·병영 관리 시 동성애자 차별금지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 판검사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제한 기간 연장
- 미선임된 변호사의 변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 연장, 신고대상 확대,
- 퇴임 전 직무 및 연고관계 선전금지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피의사실 공표의 조건·방법·범위 및 위반자 처벌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를 근절하겠습니다

- 부정부패 범죄 기업인과 권력형 비리 공직자에 대한 사면 완전 배제 법제화
- 형 확정 후 1년 이내 사면복권 금지 명문화
-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에 대한 집행유예제 폐지
- 재벌 일가에 대한 황제노역과 황제 면회 금지 및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요건 강화
- 노역 일당의 최대금액 설정과 유치기간 5년 연장
- 최장 유치일 수 초과 벌금액 별도 납입제 도입과 미납입 시 유치일수 공제 폐지

○ 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법관 증원과 노동, 의료 등 전문법원 도입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
- 미확정 판결 포함 판결문 전면 공개
- 피해구조 범죄 확대, 피해자 권리 명문화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역량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면개편

〈언론 · 미디어개혁 공약〉

○ 방송보도 심의를 전면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방송보도 심의 폐지, 자율규제 전환
- 기타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성표현 · 성범죄 · 혐오차별 표현 등에 대한 심의로 제한
- 대통령 · 여당 6, 야당 3의 관행적인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 개선
-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 구성 지원
-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게시자의 이의 제기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방송산업, 출판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근절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화
-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지속 확대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미디어 기업의 근로감독 정례화
- 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노동권 관련 항목 강화
-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마련,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하여 합리적 산정과 배분 기준 마련
- 지상파·종편·보도전문방송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 추천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 지상파·종편·보도전문방송의 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의무화

○ 지역언론을 진흥하겠습니다

-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 국민에게 미디어바우처 지급, 국민은 원하는 지역언론 지원
-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 미디어 다양성 관련 항목 강화
- 전체 정부광고 집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언론에 집행
- 언론진흥기금 등 활용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초지방정부에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립
- 공영방송, 지역방송, 지역미디어 등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확대, 교육의 질 향상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정의와 방송이 추구할 공익 등을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지속 실시로 전국적 확대
- 방송권역 확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고유주파수 설정 추진
- 지역 재난방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송 제작 지원

○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시급
-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국방개혁

〈2025년 5월 26일 국방 공약 발표〉

합리성으로 통제하고, 정의로 무장하며, 미래로 재설계하는 국방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이 더 이상 정권에 충성하는 사병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복무하는 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동원됐던 12.3 내란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뿌리째 흔든 국가적 비극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병력 천여 명이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약 70명은 중증 수준의 정신적 피해로 관심 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헌정 유린에 가담한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에 군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우리 군의 정신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무도한 권력의 피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픈 역사 앞에서, 군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민의 편에 돌려세워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군은 이제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민주주의 수호군, 민간 통제 속에서 법치와 인권을 지키는 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군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엘리트 파벌주의를 철저히 혁파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완전 직업주의 군대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합리적 국방 운영입니다.

국방은 극우 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충성이라는 시대의 광기가 아니라 법과 이성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극우 정치의 온상이 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헌정 유린의 역사와 단절하겠습니다. 대신,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적인 군사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영국의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 처럼,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정책은 민간이 설계하고, 군은 이를 집행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겠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군 간부의 신원정보를 수집하여 인사에 악용하는 관행도 근절하겠습니다.

군사법원도 폐지하여, 군 내부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절제된 군대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군은 북한의 위협을 자의적으로 과장하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북풍 공작에 이용됐습니다. 저는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



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평시에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과사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군비통제국’ 을 설치하여, 군이 아닌 민간이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국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윤리규범을 제정해 장병 모두가 무력 사용의 윤리와 시민의 권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장병의 항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전, 드론, AI 전력 등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인간의 통제를 전제로 한 법적 통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AI 자율살상무기는 명확히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국방의 혁신과 재설계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군은 더 이상 대병주의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약 47만 명의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방 경계는 무인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감한 병력 감축과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대한민국 군을 완전한 직업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병사 계급은 폐지하고, 전군을 장교와 부사관 중심의 30만 정예 직업군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부족한 병력은 예비군과 민간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당하겠습니다. 현역만으로 운영하는 국방에서 벗어나, 현역과 예비역을 통합한 총합 국방인력 개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종사자들이 다시는 무도한 권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넘치고, 사기와 복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행복한 병영에



서 최고의 전문가로 그 임무를 다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는 더 많고, 더 무거운 군대가 아닙니다.
더 작고, 더 똑똑하며, 더 절제된 군대입니다.

더 이상 군대가 두려움과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이름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정의로운 국방을 실현하고, 헌법이 지휘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군대, 기술로 무장한 평화의 방패를 약속드립니다.

〈외교통상 공약〉

-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 을 제안,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위기와 대결적 정책의 악순환 방지를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을 제안
 - 녹색 평화를 주요 의제로 하는 다자안보대화, 동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 추진
 - 대규모 연합훈련-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 전통적 안보문제와 기후위기, 핵발전소 안전,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 대처 협력 병행
 - 6개국 정상들의 ‘동아시아 녹색 평화 선언’ 등 정치적 선언 추진
 -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함께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 평화·공생 원칙 균형외교를 실시하고, 주변국 관계를 개선·정립하겠습니다
 - 한·미·일 지역 동맹화 대 북(·중)·러 군사협력 등 진영 간 집단대결체제 정책 중단
 -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 과거사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진솔한 사과 요구
 - 핵 오염수 방류 중단과 지상처리시설 건설 등 합리적 해결책 위한 공동 협력
 - 한·중·일 회의의 정례화, 사무국 역할 강화: 동아시아 녹색 평화 등과 병행
-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 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견국 및 남반구 국가의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 제안, 상설기구화 추진
 - 전 세계 ‘녹색 평화’ 의 현실화 선도와 연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추진
 - 기후변화 고통 개발도상국 지원 ‘손실과 피해 기금’ 등에 적극적 기여
 -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엔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
 -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방향으로 대 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한반도평화

〈한반도평화 공약〉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상호 체제 인정(흡수통일 배제)
-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항구화, 평화적·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 ‘남북연합’ 을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론(통일론) 재정립
- 국가보안법 7조 혹은 전체 폐지

○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을 중지하고 상호군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통해 군비통제, 나아가 상호군축 방안 등 논의
- 한반도 군비증강 대결 중지, GDP 1%까지 군비감축
-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 수정

○ 대북제재 완화-경협 재개를 이루고, 경제사회협력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 북의 핵 활동 동결-대북제재의 완화(스냅백) 등 유연한 정책 전개로 비핵화 추진
- 대북제재 완화와 연동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막혀 있는 남북 경협 재개
- 정치·군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경협 유지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생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남북한 ‘서해평화위원회’ 설립
-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교류 및 인프라 지원
- 공동생태조사 및 생태복원사업 실시



7

지역 공약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고향 강원도를 녹색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

1.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난개발특별자치도에서 생태평화특별자치도로

1) 생태평화특별자치도 전환

-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한 환경규제 완화 조항 삭제
- 녹색과 평화 중심의 비전 재구성 (남북 산림협력, 남북 생태영농협력 등)
- 탄소중립자치도 조성 조항의 의무화 · 구체화

2) 정의로운 보상체계 구축

- 환경규제 및 산림보호로 인한 강원도민의 공적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보상 보장
- 난개발이 아닌 생태보전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 확립

2.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탈핵 · 탈석탄 · 탈송전탑

: 삼척 블루파워 즉시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1) 강력한 실행력

- 대통령 취임 즉시 삼척블루파워 1 · 2호기 운영 중단 행정명령
-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상징적 폐쇄 추진

2) 정의로운 전환 모델 수립**

- 2026년까지 '삼척 에너지정의 단지' 조성
- 기존 발전소 부지를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허브로 전환
- 해고 노동자 전원 재생에너지 분야 재교육 후 고용 보장
- 연간 300억원 규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3) 탈석탄법 제정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및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 2050년이 아닌 2030년까지 탈석탄 로드맵 구축
-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국가 지원 확대



3. 홍천 양수발전소 및 송전탑 문제 해결과 주민주권 에너지 자치

1)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 유신시대의 악법인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로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일방적 개발 방지
- 에너지 민주주의법 제정으로 주민참여 보장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 보장)

2) 에너지 자치 혁신 모델 : 홍천형 에너지 자치 구축

- 홍천 에너지 자치 기본계획을 주민참여로 수립
- 마을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 2030년까지 홍천 에너지 의사결정의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 및 강원 지역으로 확산

3) 강원 에너지 주권 보장

-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수익의 70%는 지역에 환원
- 에너지 정책 결정에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주도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4. 접경지역 평화생태경제구역

1) 창조적 평화발전 모델

- 분단 상황의 제약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 정책
- 경계와 분리의 공간을 상호연결과 협력의 거점으로 전환
-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을 위한 현실적 접근
- 인도적 협력과 환경 공동관리를 통한 단계적 신뢰 구축

2) 접경 5개군 특별지구 지정**

- 강원도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평화경제특별지구로 지정
- 접경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경제 자치체제 구축
- 접경지역 거주 세제 혜택 및 생활인프라 국가 지원
- 접경지역 청년 창업 지원금 및 개발제한 보상금 지급

3) 비정치적 교류협력 플랫폼

- DMZ 생태계 보전 및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 기후위기, 전염병, 자연재해 등 초국경적 위협 공동 대응
- 분쟁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개발
- 접경지역을 평화와 생태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
- 4) 생태평화 커먼즈 조성
 - 접경 생태자원의 공동 관리·보전을 통한 자연적 통합
 -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평화교육·체험공간 확대
 -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 실험

5. 폐광지역 정의로운 산업전환: 기후정의 선도지역

- 1) 탄소중립 선도사업 추진
 - 폐광지역을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조성
 - 지역 유출 인구 방지와 새로운 정착민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 폐광 유산의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 2) 녹색일자리 대규모 창출
 - 생태복원, 자연해설사, 순환경제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마을별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일자리
 - 구석구석 생태복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 고용
- 3) 삼척·태백 녹색산업 클러스터**
 -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백지화 부지에 국가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구개발과 일자리 창출 결합
 - 전 세계 탈석탄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 모범사례 창조

6. 강원권 대학의 민주적 대학으로의 전환

- 1)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 기존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계획 재점검
 - 1년간 '대학 미래 설계' 과정을 통한 구성원 의견 수렴
 - 학생·교수·직원·지역민 동등 참여 '대학 미래회의' 구성
-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 한국어교원 등 대학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철저 적용



- 대학 이사회에 비정규직 대표 의무 참여
- 3) 대학비용 부담 완전 해소
 - 강원지역 대학 등록금 인상 완전 동결
 - 강원 출신 또는 강원 정착 희망자 특별장학금 지급
 - 졸업 후 강원 5년 거주 시 등록금 일부 면제
 - 강원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및 정착금 지원
- 4) 실험적 대학 모델, 민주적 대학 공화국
 - 4개 캠퍼스별 자치권 보장하되 연합체제 운영
 - 50세 이상 지역민 무료 평생교육 보장
 - 전 학과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정 필수화
 - 지역순환 구조: 대학 지원 → 인재 정착 → 지역 발전 → 재투자

7.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 농어업 확대

- 1) 농민기본소득 선도 모델, 월 30만원 기본소득
 - 강원도 농민 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친환경 농가 직불금 확대
 - 경사지 및 고랭지 등 강원도형 발직불제도 시행
 - 품목별 목표가격제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 2) 여성농업인 권익 보장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법적지위 보장
 - 성평등교육 및 전담인력 배치
 - 농촌 성평등 문화 확산
- 3) 생명농업으로의 전환, 강원 생명농업 공화국
 -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 생태계 구축
 -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100% 사용
 - 도농순환: 도시 음식물쓰레기 → 농촌 퇴비 시스템
 - 강원도 토종씨앗 보존 및 확산 사업

8. 기후친화 모빌리티 혁명

- 1) 농어촌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인제 모델 전도 확산

- 강원도 농어촌 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 (도 예산 지원)
- AI 수요분석 기반 최적 노선 운영
- 30분 내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 (15분 접근 vs 15분 도시)
- 마을별 공유차량 + 자원봉사 운전 시스템

2) 자전거 고속도로망

- 춘천-강릉-속초-고성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도로로 더 큰 경제효과 창출
- 건강증진 + 관광산업 + 탄소감축 통합 효과

3) 면세유 정책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연계

-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면세유 제도 개선
- 농민 혜택은 보전하되 계획적 연료 사용 유도
-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 확대로 이동권 보장

9. 강원도 의료공백 해소 및 마을돌봄 혁신

1) 마을돌봄(커뮤니티케어) 집중 지원, 면단위 종합돌봄 시스템

- 면당 1개 종합돌봄센터 건립으로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 마을별 돌봄지킴이 배치 및 방문간호·방문의료 확대
- 마을 어르신 건강지킴이 일자리 창출
- 돌봄협동조합 육성으로 지역 순환경제 구축

2)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헬기 24시간 운항
- 지역거점병원 확충으로 서울 원정진료 해소
-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및 이동진료소 운영

3) 의료진 처우 개선

- 강원도 공공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즉시 해결
-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체불임금 185억원 즉시 지급
- 의료진 차등지원금 갈등 해소 및 공정한 처우 보장
- 지역의무복무제 도입으로 의료인력 확보



10. 강원도 동물보호 선도지역 지정

- 1)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실질적 동물보호 강화
 - 명예동물보호관 대폭 확대 및 신고 제도 강화
 - 동물 관련 지역 축제의 생명존중형 축제로 단계적 전환
 - 브리더 등록제 시행 및 유기견 입양 촉진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및 기후교육 연계
- 2) 신월리 달뜨는마을 생츠퍼리 모델, 생츠퍼리 국가제도화
 -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 사례 확장
 - 국가 차원의 동물보호 생츠퍼리 지정 및 지원
 - 폐축사를 활용한 동물 복지 공간 조성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물보호 모델 구축
- 3) 야생동물-농가 상생
 - 야생동물 농가 피해 지원 확대
 - 친환경적 야생동물 보호 정책 수립
 - 축산시설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감축
 - 공장식 축산 단계적 철폐
- 4) 2030년 강원도 비전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평화 자치공화국
 - 탄소중립 달성률 100%
 - 재생에너지 자급률 80%
 - 접경지역 평화공존 모델 정착
 - 발전산업/폐광산업의 정의로운 기후정의 전환 성공 사례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

갈아엮자 불평등 경기, 함께 사는 경기도

1. 공공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의료와 돌봄의 공공화

- 1)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민간위탁 추진 철회, 시민 참여 경영 정상화, 지방의료원법 위탁 관련 조항 개정
- 2)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제2 공공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확대, 지방의료원 중심 공공의료 체계 구축
- 3) 24시간 통합공공돌봄센터 설치: 모든 읍면동에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 강화
- 4) 공공 산후조리원 · 국공립 어린이집 · 요양시설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

2. 생태 · 기후정의로 전환하는 경기

- 1) 경기국제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수원 군비행장 폐쇄: 기후위기와 군사화를 동시에 심화시키고 논습지 파괴와 지역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중단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전면 재검토
- 3) 탄소세 도입 및 대기업 감축 의무 강화
- 4) 평화경제특구 사업 폐기, 개발 중심 관광정책 중단, 생태공정관광으로의 전환

3.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을

- 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청 승격
- 2)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강화
- 4) 작업중지권 강화
- 5) 산업단지 노동조건 개선
- 6)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4.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공기반 기후일자리

- 1) 기후정의조례 제정: 실질적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2) 주 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 3) 공공기반 기후일자리 확대: 재생에너지, 탈탄소 공공교통, 탄소제로 건물,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 4) 청년 기후일자리 창출: 기후·의료·생명안전·돌봄·노동인권 감시 분야 정규직 일자리 제공

5.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 혁신

- 1)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버스·지하철·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및 민간 노선 재공영화
- 2) 통합 공공교통체계 구축: 광역철도망 중심의 통합교통체계 구축
- 3) 1만원 기후패스 도입: 2030년 무상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패스 실시
- 4) 교통약자 무상교통 우선 도입: 청소년·노인·장애인 대상 무상교통 시행, 무궁화호 노선 유지
- 5) 운수노동자 처우 개선: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정착

6. 주거는 기본권, 안정된 삶의 터전을 위하여

- 1) 다주택 규제 및 공공임대 확대: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3) 청년 주거권 보장 조례 제정: 보증금 제한, 월세 상한제 등 청년 주거 부담 경감
- 4) 상생형 주거 개선: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청년-임대인 상생구조 설계
- 5) 주거 공공성 강화: 부동산 부양정책 종식, 공공토지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거 안정



7.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기회

- 1) 청년수당 확대: 월 단위 청년기본수당 지급 및 실업청년 대상 현금지원 확대
- 2) 무상등록금 실현: 지자체 등록금 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무상교육 추진
- 3)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기후·돌봄·노동인권 감시활동 등 지자체 책임 정규직 일자리 제공
- 4) 청년실태조사 제도화: 고용형태, 연령, 성정체성, 성별, 임금, 주거형태, 부채 등 유형별 청년실태조사 및 3개년 보고서 발간
- 5) 청년 노동조건 개선: 생활임금 보장 및 지역 필요 분야 공공일자리 확대

8.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와 정치개혁

- 1)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 주민발안·투표·소환 요건 완화 및 실효성 강화
- 2)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접선출제 도입
- 3)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지방선거 비례대표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4) 지역정당 활성화: 정당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합법화로 다양한 지역 정치세력의 참여 보장

9.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 생존권 보장

- 1)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금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신속한 개정 추진
- 2) 평화 중심 도시전략: 군사시설 중심에서 평화기반 도시전략으로 전환
- 3) 평화와 주권 강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 및 접경지역 상생 방안 마련



경남

노동 중심 산업정책으로 경남 제조업 활성화

1. 노동 중심 산업정책으로 경남 제조업 활성화

- 1) 숙련과 혁신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 2) 중소기업이나 하청에 소속된 노동자의 숙련 형성 지원 (폴리텍 진학시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등)
- 3) 지역 내 산학연이 함께 하는 중소기업 공동 R&D 클러스터 설립으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4) 노동 중심적인 제조업발전특별법과 조선산업 특별법 제정
- 5) 지역 고용정보망, 노동자 세탁소, 노동자 조식센터,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센터 등 일하는 사람 중심의 지원 인프라 구축

※ 주요 제조업 특별 공약

◎ 방위산업

- 방산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
- 방산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 우주항공

- 우주항공 핵심 기반인 연구 및 제작 노동자 처우 개선
- 기초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 조선

-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및 다단계 하도급 근절
- 조선업 노동자 보호육성 및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2.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

- 1) 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직노동자 충고용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
- 2) 지역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건물태양광 및 친환경 리모델링 등을 공공이 책임지고 주도, 지나친 이격거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
- 3)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불 등 각종 재난대응 강화 및 재해보상 등 지원 강화, 농어업 피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실효성 강화
- 4) 지역 관광공사 역할 강화하여 환경 개발이 아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3. 대중교통 공영화 및 부울경 광역전철망 구축

- 1) 민간업자의 이윤만 보장하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 2) 대중교통 정액제 및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교통 실시(인접일 경우 광역 간에도 적용)
- 3) 부울경 광역전철망 구축을 통해 광역 간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
- 4) 천원택시 등 농촌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4.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등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과 복지 강화

- 1) 읍면동 통합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단계적 무상화
- 2) 지역공공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의료 취약지역부터 방문진료 및 주치의제 활성화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및 간병비 급여화로 간병비 부담 대폭 완화
- 4) 직장 돌봄 및 지역공동체 돌봄 지원으로 가족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으로 전환하고 관련 지원 강화
- 5) 가사노동을 포함한 각종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가치 인정을 위한 지원 강화



5.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자치 강화

- 1) 중앙 집중식 정치, 경제 체제가 아닌 지역 분산 정책 시행
- 2) 대기업 수도권 이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의 수도권 신규 설립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수도권 집중 억제
- 3) 읍면동 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발안제 강화, 지역정당 허용 등 기득권 중심의 지방분권이 아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
- 4) 산업 단지, 에너지 또는 폐기물 시설 도입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과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기여 법제화
- 5)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특별 예산 편성

※ 김해 지역 맞춤 공약

1. 김해 산업단지 정비

김해 산업단지는 30~40년 전부터 산지 계곡 등을 중심으로 시외곽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 산단정비를 위한 저리대출이나 세제지원으로 산지, 계곡의 공장 이전이 필요

2. 교통

시외곽은 물론, 시내에도 여전히 노선 문제가 대두됨.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자가용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장유, 김해 구도심, 진영을 아우르는 교통체계가 필요함. 트램도 대안이 될 수 있음

3. 의료

김해시 의료원이 필요. 공공병원이 없는 실정. 종합병원이었던 중앙병원이 적자로 폐업이 예정됨. 진료받으러 창원이나 부산에 가는 실정. 취약계층은 더구나 의료서비스 받기 힘들

4. 외국인 노동인권센터 필요

전국 두번째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음. 이를 지원하는 곳은 종교단체 몇곳에 불과.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필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롭게 기후재난 대책 정의롭게

1.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노동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

첫째, 전기로 전환, 그린수소 기반 제강 등 탈소·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하되 이에 생산공정 변화와 고용구조 개편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강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에 따라 노동자 참여, 직무 전환 훈련과 생계비 지원, 지역 기반 고용보장이 함께 이루어져 할 것임.

둘째, ‘안전한 일터’로의 전환이 철강산업 전환의 핵심임. 철강산업의 기술전환은 단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하는 전환이어야 함. 철강산업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산업임.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중심의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할 것임.

셋째, 철강산업 전환에서 비정규직에 기반한 위험의 외주화를 철폐하고, 원청 직접고용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임. 당선 되면 정부가 ‘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도급비 보장과 차별시정 명령을 할 것임.

2.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대책 : 일상의 회복을 넘어 ‘과거보다 나은 회복

첫째, ‘안전한 복원’을 하겠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주요 재난 시 심신



을 달랠 수 있는 안정적 이재민 대피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긴급 재난 시, 체육관 등 긴급 대피장소에서는 3일 이하로 머물고 빠르게 각종 연수원이나 리조트 등으로 이동하여 심신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코로나19때의 대응처럼 가능합니다.

둘째, ‘차별하지 않는 복원’ 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난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긴급 생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자와 지자체를 구하는 복원’ 을 하겠습니다. 재난을 겪은 지자체가 재정적 위기를 겪지 않게 정부가 재난피해자 숙식비, 임시주택 공급비, 기반 시설비 상당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과 호주의 사례처럼 지역적 특성과 연령 등 계층적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시설, 준영구시설, 공동거주주택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탄력적 복원’ 을 하겠습니다.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도시공학, 환경, 농업, 산림, 관광, 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과 공동체의 복구와 재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적 복원’ 을 하겠습니다. 토양미생물복원센터를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토양미생물을 회복시켜 온전한 자연생태의 복원함으로써 산불 재난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과거보다 나은 회복’ 을 주도 하겠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삶의 터전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3. 포항 지진 피해 소송 패소에 대한 대책

첫째, 항소심의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판결임

둘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법적 개별보상이 아닌 전체 시민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넷째, 시민 숙의과정과 합의를 전제로 보상금의 일정액을 시립병원, 산재 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함.

4.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5. 탈핵 : 수명연장 반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안전한 경북



광주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 강화 재생에너지와 탈핵으로 기후정의 확대

1. 5.18 정신계승 헌법전문 삽입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 1) 5.18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
 -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 제공

2.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1) 재생에너지 생태계 말살하는 광주 계통통제 저지
- 2) 영광 한빛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 계획 마련 및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된 로드맵 제시와 정책추진

3.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와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 1) 불법적이며,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영광 한빛1·2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
- 2) 영광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호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을 위한 기존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 건설’ 강행 중지. 호남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건설 여부 결정 필요

4.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 1)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 도입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 2) 전력과 물 수요 폭증을 불러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5. 군공항 이전을 넘어 폐쇄

- 1) 현재 전국에 군공항 16개도 많음. 이미 있는 군공항 통폐합 시키고, 폐쇄시키는 것이 나은 선택
- 2) 군공항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은 더이 상 없어야 함. 건설 과정에서 이후 활용까지 탄소 덩어리인 공항 건설은 투자가치를 찾기 어려운 좌초자산일 뿐



대구

성장 사회를 넘어, 전환 · 생태 · 돌봄 사회로!

〈전환 사회, 대구 공약〉

1. ‘친환경 미래산업’ 으로 ‘정의로운 전환’

- 1)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 으로 지정
- 2)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구축
- 3) ‘정의로운 전환기금’ 통한 교육 · 소득 보장 및 전환 지원

2.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1) 태양광 발전 확대에 매년 시 예산의 5% 투자로 일자리 6,000개 확대
- 2)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따뜻한 주거복지’ 와 함께 일자리 6,800개 확대
- 3) 공공기관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 50% 상향

〈생태 사회, 대구 공약〉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교통시스템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

- 1)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실시 및 반값교통비 실현,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 2) 대중교통 연계되는 공유자전거 도입 및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 확충
- 3)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단계적 100% 추진

4. 낙동강 및 지역하천 재자연화 및 도심공원 확충

- 1) 낙동강 및 금호강, 신천 등 재자연화 추진
- 2) 산업단지 무방류시스템 등 하 ·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 3) 열대야, 폭염 등을 완화할 녹색 도심공원 확충

〈돌봄 사회, 대구 공약〉

5. 돌봄 국가(지방정부) 책임제

- 1) 통합적 돌봄정책 운영을 위해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지원
- 2) 복지+의료+고용+돌봄 등 모든 복지제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3)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6.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강화

- 1) 제2 대구의료원 조기 건립
- 2) 공공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간호사·의사 등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3) 시민 중심의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원 역할 전환

7. 대구지역 현안 대책

- 1)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관련
 - － 신공항 추진 중단 및 기존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2)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 － 시·도민 공문화위원회 구성
 - － 최종적으로 시·도민의 투표로 결정
- 3)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관련
 - －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토목사업인 취수원 안동댐 이전 논의 폐기
 - － 취수원 이전 논의 전에 대구와 구미 산업단지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 － 공장 폐수의 낙동강 유입 방지, 보 해체 또는 개방으로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함
 - －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낙동강의 수질을 먼저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
- 4)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관련 (대구희망원, 청암재단 등)
 - －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 거주 장애인에 개인별 주택 및 24시간 지원 보장
 - － 또한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장 대책 마련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준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대전

녹색 전환의 중심 과학수도 대전

1. 과학수도 대전

- 1) 대덕연구단지를 기후정의연구단지로 전환
 - 대덕연구단지를 기후위기, 녹색전환 등 과제를 중심으로 전환
 - 기존 과학기술연구를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전환 과제 강화
- 2) 연구노동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등 과학기술계의 해묵은 문제 해결
 -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실패를 긍정하는 연구문화 확산, 연구노동자 중심의 과제 선정·집행 시스템 구축
 - 은퇴연구자 소셜벤처 설립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2. 기후위기 너머 생태도시 대전

- 1) 기후위기 극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 버스·도시철도·BRT·타슈·마을버스 등 월 1만원 통합이용권 발행 지원
 - 대전역, 서대전역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 노선 확대
 - 서대전역 노선 증차
-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대전 에너지 자립도 제고
 - 대전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수립 지원
 - 공공기관부터 주차장, 건물, 유허부지 등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 맥쿼리 등 민간업자가 소유한 도시가스 공급 및 열병합 발전설비 공영화
 - 대규모 복합화력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시키는 발전 용량 증설 금지
- 3)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보문산 개발, 3대 하천 준설 등 난개발 중단
- 4) 대덕구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전환

- 입주기업의 친환경 기술 전환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 집중 지원
- 기존 입주기업 재생에너지 설비 전환 및 녹색기술 융복합 사업 지원
- 지역주민, 노동자 기업 간 ‘친환경 노동존중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3. 함께 잘사는 대전

-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
 -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전 지역내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이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 2)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공공기관 발주 사업 인센티브 적용
- 3)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 전세사기특별법을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따라 개정
 - 특히, 다가구주택과 공동담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 전세사기 및 관리주체 부재한 다가구주택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 대중교통 연계성을 고려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4) 소수자 인권 지원
 -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인프라 지원
 - 과학도시 대전형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교육-취업-정주 요건 확대
 - 청소년을 포함하는 교육관계자 교육현장 갈등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지원
- 5)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4. 안전하고 건강한 대전

- 1) 탈핵도시로 전환
 - 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연료 제작 중단
 - 대전 핵폐기물 문제 해결! 원자력 안전감시기구 역할 강화
 - 탈핵 연구 적극 지원
- 2) 재난·재해 예방 및 지역 안전 공동체 강화



- 공공의료확대, 대전의료원 ·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 재난 피해 공동체 회복 위한 ‘재난지원금우선 지원제도’ 및 피해지역 주민 심리상담센터 운영
- 피해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여성 1인가구 안전 도시 구현

돌봄, 지역, 환경이 살아있는 부산

1.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 · 무상간병,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시대

1) 임신 · 출생 사회책임제

-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 창구 및 지원 체계 마련
- 2) 전 생애 통합 돌봄으로 모두가 걱정 없는 돌봄 사회 구축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통합 돌봄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2. 기후위기 극복, 교통비 걱정 없는 사회로 공공성 강화,

버스준공영제 폐지로 공공교통 전환하는 무상대중교통 실현

1) 무상교통으로 가는 K-패스 전국적 통합 운영

- 중앙 정부 100% 재정 책임 및 안정적 운영
- 2) 버스준공영제 폐지
 -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추진

3.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

1) 국가균형발전 정책 도입, 균형 발전 지원체계 마련 등

2) 산업은행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3) 지역공공은행 설립

- 현행 MG새마을금고를 개편, 발전하는 것이 골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 서울 강남 위치)
- 지역공공은행의 중앙본부 및 사무처를 부산에 설립 계획



4. 지역소멸 대응

- 1)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기본법 제정
- 2)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 교육비 걱정 없는 지방대 등록금 및 기숙사비 무상 실시
- 3) 산업은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력 육성 및 채용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 마련
- 4) 녹색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 임차인 무제한 갱신권 인정 등 주거 안정 보장

5.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금지

- 1)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금지
- 2) 발전소 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 3) 핵발전소 안전성 평가 강화 및 지역 권한 확대

6.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

- 1)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타당성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 2) 사업의 위험성과 비현실적인 추진 상황 투명하게 공개 및 철회

사람과 환경 중심 노동자의 도시로

1. 산업전환기 해고금지 및 일자리 국가 책임제

산업전환기 울산이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큼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 되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의 변화, 여기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은 울산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강화

부울경 노동자가 다른 지역 노동자보다 산재재해 입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부울경 지역 관할하는 부산고용노동청 재해율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대상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3년을 맞는 지금,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중 74건에 불과하고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경영책임자는 노동부의 내사종결, 검찰 불기소, 법원의 부죄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안법 재정이 전면



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주4일제 시범도시 지정

지금 OECD나 우리나라 KBI에서 주4일제와 관련된 생산성 조사를 했는데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6일 근무할 때에는 주 6일제를 할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호주는 2024년 공공부분 주4일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시간단축을 시도한 곳에서 직원만족도와 생산성이 모두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도 제조업이 대부분이지만 지난 대선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일의 능률도 지키고 워라밸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핵 폐기물 저장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탈핵 및 재생에너지 공약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월성2,3,4호기 설계수명 만료가 목전입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사고 관리계획서 승인 절차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확인하고 핵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11차 전기본이 원자력 중심의 정책이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미흡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5. 환경감시 결과 공개 및 처벌강화

울산은 환경감시 시스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실천운동의 확산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대다수는 국내10대 기업이 차지할 만큼 환경의 선두에 설 기업들의 환경감시 시스템의 강화와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6. 부유식해상풍력

세계 주요나라 탄소중립 선언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확대로 부유식 해상풍력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바다 위의 유전으로 대한민국 그린경제 전환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지원이 필요합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6.2GW로 사상 최초의 대규모이고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평가, 해저 지질조사를 모두 마쳐 20년 장기고정가격에 낙찰되어 지금은 제조단계에 돌입할 만큼 규모와 시기상 새 정부가 반드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그동안 나락으로 떨어져 OECD 꼴찌인 재생에너지의 회복과 성장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7. 고용확대와 인구유출 방지책

현대중공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불안 및 해고는 곧 인구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필수적인데 지원하는 노동자들이 없어 조선업은 위기입니다.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확대와 인구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천

평화로운 서해, 자치와 공공이 책임지는 인천

1. 서해5도 평화와 생존권 : 서해평화진흥법 제정

2. 자치분권

- 1) 읍·면·동 주민참여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법개정
 - 주민 발안·소환·투표의 요건 완화
- 2) 양당 중심 정치제도 극복
 -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비례성확보
 -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도입 등 선거법개정

3. 공공의료와 시민복지

- 1) 공공의료기관 확충
 - 제2인천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설립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2) 지역 공공의대 설립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 3)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4. 환경·기후 정의

- 1) 실질적 수도권매립지 종료
 - 대통령실 직속 수도권매립지종료 대책 기구 설치
 - 투명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계획 수립
- 2)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
 -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 주민참여 풍력발전 조성, 도심 태양광 발전 확대

노동과 녹색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공공 필수의료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소멸 극복

1.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로 공공필수의료 기반 확충

- 1)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광역지자체
- 2) 의료수요는 전국 최고이나, 섬·산단 등 지역민의 의료접근성은 취약함
- 3) 1인당 연간 의료비도 전국 최고(2,940천원)
- 4)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사령탑) 확충
- 5)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국가 주도의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 기반 마련

2. 노동과 녹색 중심의 산업 대전환

- 1)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산업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와 산업전환 대책 마련
(현재 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 됨)
- 2) 범정부 위기대응 협의체에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 의무화

3.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1) 최근 전남에서만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25년 전남에서 확인된 사망사고만 3월에 8건, 4월에 2건)
-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 책임과 중대재해사업장 특별감독 강화
- 3) 노후산단 안전 특별 점검 법제화
- 4) 노정교섭 법제화

4. 인권이 경제다

- 1) 노동자 인권 문제로 미국 수출 보류(신안 태평염전 사례)
- 2) 미국, 농수축산 분야 이주외국인 노동자 인신매매 실태조사 예정



- 3)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수·축산업과 제조업 생산성 유지 불가능
- 4) 이주사회 전환을 위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5) 내·외국인, 이·정주노동자 인권의식 함양과 구제방안 제도 마련

5.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 1) 농어민 공익수당 전국적으로 확대(13개 시·도)
- 2) 도·농간 소득 격차가 커, 농어민 소득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 지원 필요
- 3)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 4) 열악한 지자체 지방재정 건전성 위협, 농어촌공동화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제도화

6.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등

- 1) 영광 원전 폐지
- 2) 해상풍력 등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
- 3) 재생에너지 이익 지역주민 공유 강화

7. 지역소멸 위기 극복

- 1) 지방분권(지방재정과 권한) 강화
- 2) 입시경쟁완화, 대학무상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실현
- 3) 공공 지역교통 기반 마련

정의로운 전환으로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특별자치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 1)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서남대에 국립의과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2)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국 신설
 - 전북특자도에 건강국 신설과 지역건강위원회 설치
 - 지역 보건의료 정책 수립, 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감독

2.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중심으로

- 1) 주4일제 도입
 - 주4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달성
- 2) 연차휴가 25일로 확대하고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 3) 전북 상용차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시스템 구축
- 4) 미래 상용차 산업 발전 전략 마련
- 5) 전북 상용차지원센터, 상용자동차기술연구소 신설
- 6) 상용차 관련 업체 충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원
- 7) 상용차 산업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3. 새만금을 대전환하여 생태관광 중심지로

- 1) 상시해수유통과 해수유통 확대
 - -1.5m 관리수위 변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만금 사업 전면 개편
 -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
 - 2급수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
- 2) 어민 생존권보장 수산업 복원 대책 마련
- 새만금 내해지역 자치관리 구역 지정
 - 새만금호 수질개선 후 2천 헥타르 규모의 양식단지조성.
 - 6천여 전북 어민들의 삶이 달린 수산업을 부활

4. 전북특별자치도를 농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 1) 농업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확충
- 농정의 녹색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보가 필수적. 그동안 농업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
 -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용두사미,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농업예산 5%를 달성하여 녹색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주도
- 2)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모든 농어민 개개인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
 -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소득불안정 해소,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개선.
 -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 3)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정책으로 소득 안정화
- 식량자급목표 실현을 위해 생산비에 기반한 최저가격 보장,
 -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계약재배 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
- 4) 중소가축농을 육성하고 농어업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
- 공익형직불제의 단계적인 증액(년 2.4조→ 5조)
 -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확대
 - 선택형직불금(친환경)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



5.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의로운 녹색 전환, 탈탄소사회로

- 1)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 기존 대규모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재편, 송전선로 건설 관련 법령 재편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정책 재검토 및 국가 전략사업의 국토 재배치
- 2)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
 -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 한빛원장 수명연장 반대
 -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의 권한 확대 (정읍, 고창포함)
- 3) 그린수소 혁신
 - 응용분야나 수소연료전지에 특화되었던 한계 극복
 -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추진
- 4) 생태농어업 기술혁신
 - 바이오기술 혁신으로 관행농업과 화학농업 극복하고 생태농어업으로 전환
- 5)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
 - 농지전용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입지 제한
 - 마을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자립 지원
 - 농어업용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확대
 - 농기계 및 농어업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지원
- 6)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
- 7) 농어민 주도 지역 재생에너지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 조성
 -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



제주

생태평화의 섬, 제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1. 제주 제2공항 추진 백지화

- 1)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절차 중단
- 2) 기존 공항 시설 활용 검토
- 3) ‘무상 대중교통 및 버스 공영화’ 전국 최초 도입에 제2공항 예산 사용

2.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 1) 제주4·3평화 왜곡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 2) ‘4·3민중항쟁’ 으로 정명과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
- 3) 제주4·3책임 미국의 공식사과와 배상 요구
- 4)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가지원 확대

3. 제주를 세계 생태평화의 섬으로!

- 1)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해군기지를 비롯한 제주도 내 군사시설 폐쇄 또는 획기적 감축
- 2) 핵을 이용한 한 무기와 군용장비, 군 시설의 개발과 이용, 이동 금지
- 3) 신항만 추진 중단,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4) 알뜨르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 추진 중단과 도민 주도 평화대공원 조성
- 5)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법 폐지와 생태 돌봄 공공성 중심의 대체 입법 추진

4.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전면 전환

- 1) 온실가스 배출 심화시키는 신규 2기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및 정의로운 전환

- 
- 2) 공공성과 생태계 보전을 전제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 3) 녹색일자리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지원
 - 4)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중앙 정부 지원 방향 마련

5. 불평등의 섬에서 노동중심 돌봄 수놓음의 섬으로!

- 1) 무상돌봄 · 무상간병, 공공주택 확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실시
- 2) 공공의료확대, 공공주치의 제도지원 확대
- 3)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 산별 교섭, 지자체 노·정교섭 등 단체교섭 지원



충남

기후재난을 막는 한 표, 일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한 표 충남을 바꾸는 당신의 한 표!

1. 탄소중립사회 이행과정에서 정의로운전환 실현

- 1)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하고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 2) 발전노동자 충고용 보장
- 3)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서산민간공항 추진 백지화
- 4) 1만원 기후패스로 무상 대중교통 시대 열어 도민복지와 탄소중립 실현
- 5) 충남에너지공사 설립(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6)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7) 제철, 석유화학 등 지역 탄소다량배출업종 탄소중립 기반 조성

2.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충남

- 1) 노랑봉투법 재추진하여 누구나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조할권리 보장
-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실효성 높여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 3) 주4일근무제 도입으로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사회 실현
- 4) 최저임금을 높이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법 제정으로 실질임금을 높이고 임금격차 해소

3.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농어민이 행복한 충남

- 1) 기후생태직불금 전면도입으로 기후재난 대비, 기후위기 극복!
- 2) 도시지역 로컬푸드직매장 전면 확대로 농민은 가격보장, 소비자는 가계안정!
- 3) 쌀수입 즉각 중단으로 쌀생산 전국 2위 충남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4. 전 생애주기 행복돌봄 충남

- 1)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실시하여 지역소멸 극복하고 평등교육 실현
- 2) 노인, 아동, 장애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법 개정하여 국가가 통합관리하는 사회서비스공사 설립
- 3)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 4)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 5)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5.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충남


- 1)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대로 의료서비스 강화해서 무상의료 실현
- 2) 대중교통공사 설립으로 무상대중교통의 기반조성
- 3) 지역 부가가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선순환경제 추진
- 4) 비례성을 높이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충북

노동기본권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하여 지역을 살리고 삶을 지킨다

1. 노동자 생존권 보장 : 공장 폐쇄 예정 사업장 고용안정 통해 지역경제 안정
 - 엘지화학, 네슬레, 홈플러스 동청주점 구조조정 및 폐업 관련 대책 마련
2.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보장
 - 의료 공공성강화,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개선
 - 1) 충북지역 공공보건 거버넌스 구축
 - : 지방에서는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할 수없는 상황 반복
 - 2) 지역의사제, 의사 인력 국가책임제, 간병비 부담 더는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필요
 -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및 의료비 상한제 확대 ▲지역 소아의료 체계 구축(청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충북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설립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그리고 야간과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 설립 등)
 - ▲충북도내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응급 의료인력 확충 ▲공공병원의 정원 확대 및 충분한 간호인력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지역사회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체계 구축 필요
 - 3) 공공의료강화
 - 의료인력 확충/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공공병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국가책임 지원제/어린이병원 설립 건립,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병원으로 지정 운영
3. 차별없는 노동, 안전한 일터
 - 1) 이동노동자쉼터 확대
 - 2) 시군마다 작업복 공동세탁소와 노동자건강센터 설치지원

- 
- 3) 시군단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립지원
 - 4) 노동안전 : 민간참여 노동안전지킴이단 도입 및 권한 강화 법제화
 - 5) 생명안전: 생활안전기본법제정
 - 6)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 7)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안전 및 저임금구조 개선

4. 장애 인권

- 1) 장애인 시설 탈시설 자립 5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 2) 권리기반,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 3)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면 확대
- 4) DRT(수요응답버스), 시외버스, 농촌버스 저성버스 100% 의무화
- 5) 충북지역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성화 및 국비 지원

5. 기후 분야

- 1) 2035년 2018년 대비 충북 탄소감축 목표 70% 상향 의무화
- 2) CTX(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중단 BRT(간선급행) 시스템 강화
 - CTX-충북선-BRT-버스 연계 시스템, 버스전용차선 구축
- 3) 충북권 광역버스 운행 시스템 구축:
 - 청주(충주)-진천/음성/증평 등
- 4)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 반대
- 5) 수소연료전지중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 6) 충북에너지공사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공성 확립
 - 주민이 소유, 운영,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총 고용 보장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
 - 산업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 및 총고용 유지